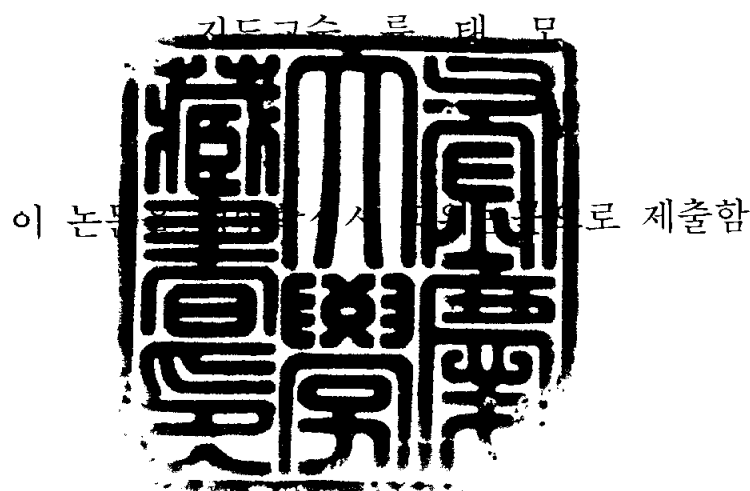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전공)

육 외 수

육외수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12월 일

주 심 경영학박사 윤 영 삼



위 원 경영학박사 홍 재 범



위 원 경영학박사 류 태 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4
II.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1. 소상공인의 개념과 특성	5
가.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	5
나.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	8
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특성	14
2.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5
가. 소상공인 지원의 이론적 배경	15
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상황	17
3. 소상공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19
III.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6
1. 우리나라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	26
가. 창업 및 경영지도 부문	26
나.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	28
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	32

2. 외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39
가. 미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39
나.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49
3.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문제점	55
가.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	55
나. 실무적인 측면의 문제	59
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도의 문제	68
IV. 소상공인 지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77
1.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77
가. 소상공인 육성의 필요성	79
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81
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제도의 일원화 및 기타제도	85
2. 실무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89
가. 창업 및 경영지도의 개선	89
나.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방법 개선	93
3.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방안	97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98
나. 신용보증지원 및 신용대출의 확대	103
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104
V. 결 론	107
1. 연구결과의 요약	10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과제	111

표 목 차

<표 II -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법	6
<표 II - 2>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형태의 분류	8
<표 II - 3>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	9
<표 II - 4> 한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	10
<표 II - 5> 한국의 소상공인 종업원 수	11
<표 II - 6> 소상공업의 생성과정과 경영상 특성	14
<표 III - 1> 소상공인 지원 분야별 상담 현황	26
<표 III - 2> 고용효과	28
<표 III - 3>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현황	30
<표 III - 4> 2003년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점 추진업무	31
<표 III -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33
<표 III - 6> 2002년도 정책자금 지원 업종별 수혜 업종 Best10	39
<표 III - 7> 한국과 미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비교	43
<표 III - 8> 일본의 중소기업의 정의(범위)	50
<표 III - 9> 일본의 소규모 기업의 범위	50
<표 III - 10> 일본 소기업 지원체계	52
<표 III - 11>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 이외에 도움을 받은 부분은?	62
<표 III - 12> 사업 운영 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64
<표 III - 13> 소상공인 대출실행 현황	69
<표 III - 14> 신용보증서 발급과정 시 문제점	75
<표 IV - 1>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및 예산 현황	83

그 립 목 차

<그림 III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체계	35
<그림 III -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절차	38
<그림 III - 3> 소상공인 지원 체계 (Top Down)	57
<그림 III -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절차도 (보증기관 이용 시)	70
<그림 IV - 1>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79
<그림 IV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개선방안 (보증기관 이용 시)	100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 외 수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요 약 문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국내 전체 사업자의 89%를 형성하고 있으나 소상공업이 영세하고 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가 많아 제조업 중심의 시책 하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고 기술 및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상공업이 산업의 풀뿌리로서 국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과 실직자들을 고용창출로 유도하여 생계수단이 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져 현재 소상공업은 대기업·중소기업과 함께 한국경제의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보았다.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해야 하며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불 창출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와 수익활성화 기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상공인과 가장 근접해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지휘·

통제를 받고 있어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인 Top Down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업무가 다수 기관의 중복적인 업무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차별화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제도를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며 아울러 현재의 소상공업 휴·폐업을 감안해 볼 때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실무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어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센터의 획일화된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센터별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서는 이에 맞는 내부조직개편도 필요하다. 두 번째,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종별, 계층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센터의 전문성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및 창업도우미 제도의 확대와 소상공인분야의 종합적인 D/B 구축과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지원시점과 방식을 개선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보호·지원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경쟁주체로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도 소상공업을 산업정책의 대상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적 시각과 사회정책적 시각을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기조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확충이 우리경제의 밝은 미래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과제임을 생각해보면서 본 논문이 산업의 풀뿌리로 국내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Efficient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Woi · Su Yuck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mall business manager refers to a person who runs a business of even smaller scale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all businesses form 89% of the whole of Korean business. Yet, most small businesses are rather petty and heavily relied on service and distribution fields. Under the manufacturing focused policy, small businesses take no importance of their own. Since the improvement of industry system and the changes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environment, small business now serves as a root for the whole industry. It has the function of a capillary and encourage the employment rates, find out the social economically many specific gravity which take a social safety net. The here and now, small business stands in three axis's of Korean economic with big business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ow, four years after the commencing of supporting policy for small businesses, this research understand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small business supporting system. It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 scheme of efficient small business supporting system into two parts: systematic aspect and practical affairs aspect.

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ts system. First, people who involved in small businesses and industries should be actively brought up based on the belief that small businesses and industries are a boost for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o achieve the involving government's goal of reaching US\$ 20,000, it is an essential for them to strengthen the base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d profit of small business.

Secondly, the role and function o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need to be further extended since it is mostly and closely inter related to the people who work in these areas. Currently, the above mentioned supporting task is under the contro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Top Down' supporting structure which hinder the autonomy of its own needs to be amended.

Third, the supporting program for opening a new business lacks the professionalism due to several centers over-lapping work. This does not enable for people to receive quality support. The support center should be practically developed as a center solely for supporting the small business. Various governmental support centers for opening a new business should be united as a support center for small business. Besides, considering the current rate of closing-down small businesses, the system of tax deduction for small businesses should be introduced soon.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aspect is illustrated below. First, to encourage the opening of new businesses and an active management, the interest should be on quality before quantity. This means strengthening the closely on-spot support system. The uniformed nationwide center shouldn't be recommended. The inner re structuring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pecific service depending upon each center.

Secondly, to encourage the support for education, information and other fields, each areas' specialists should be trained. Also, a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developed since a specific training is necessary for people in different businesses and classes. In addition, the system of maximizing volunteers and helpers to supply the need of professionals in the center should be extended. Building a comprehensive D/B structure for small business field and researching on local economy should be stressed on further.

Third, to activate the subsidy for small business, timing policy fund aid and methods need to be improv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aid for other purposes, the after management of subsidy for small business should be focused on. Especially, the system has to be changed to allow for the people who wants to open a new business to receive the total subsidy.

More than above mentioned improvements, having a belief that small business is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enterprise in Korean economy rather than a protect and aid necessary business is important. The policy management department also needs to have an broadened aspect that small businesses are not only belong to the industry policy but also economical and social aspects.

Finally, the extension of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will lead to invest the bright future of the country's economy. It is a main task to develop the local economy. Since small business is a root for the country's thriving industry, building competitiveness and extending independence to activate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is vital. Thus, the research will be used as a useful resource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es efficiently.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업(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타업종의 경우는 5인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소상공인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말 기준으로 전체사업체 286만개 사업체 중 254만개 업체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전체 산업 종업원 수 1,153만명 중 490만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면서 개별단위로서는 대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만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만 사업체 수와 고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가 많아 제조업 중심의 시책 하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산업구조, 기술 및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상공업은 경제적·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그 중요성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업은 대기업 또는 중기업 보다 더 많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 자동화에 따라 대기업 및 제조업에서는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로부터의 잉여 인력은 서비스 유통 분야의 소상공업체가 주로 제공하는 일자리로 흡수되고 있다. 두 번째,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이 태어나는 기술집약적, 정보집약적 기업들 중 대부분이 소상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소상공업은 산업의 풀뿌리로서 모세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새로운 산업의 생성과 발전에 첨병역할을 한다. 네번째, 소상공업은 전문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자, 준비되지 못한 실직자, 저학력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의 수단이 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은 그 수가 많아서 산업·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연관 효과가 큰 특정 기업군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국민경제에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제도적인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악화에 따른 대량 실업발생으로, 근로자 일거리 상실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당시 실직·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의 근본적인 해결을 일자리 창출로 유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1999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신설되고 2000년 12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실업을 줄였음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 분포 되어있는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간 경제격차의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해왔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전체산업 사업체 수에서 89%를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업이 국민의 4분의 1이상의 생계가 달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향후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대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한국경제의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매김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가 된다고 할 수 있으

며 또한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야만 하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 ·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실시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의 지원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와 종업원 수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한가를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총 5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은 본 논문 주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본 연구에 대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다루었고 제 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 연구 대상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 특성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상황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를 창업과 경영지도부문, 교육 · 정보제공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부문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미국의 소기업 지원제도와 일본의 소규모사업자 지원제도와 비교해 보았으며, 제 IV 장에서는 앞장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마지막 제 V 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고 본 연구의 유용성 및 한계성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국내외 각종 문헌조사,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내부자료 등 문헌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문헌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문헌 및 연구결과·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업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기업 지원 방식인 SBDC 제도와 자금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자금지원 결정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지원도 함께 살펴보았다.

II.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소상공인의 개념과 특성

가. 소상공인의 개념과 범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제조업과 중규모 기업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이와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처한 현실과 미래의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한정된 수의 제조업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더 규모가 작은 모든 업종의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주안에 속해 있으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부터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지는 집단이다.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소상공인은 개인 사업체 및 비법인 단체의 기업형태를 가지고 영세적인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²⁾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상공인은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그리고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기업을 소상공인 이라고 칭하고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³⁾

소상공인에 가장 가까운 용어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업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소상공인이란 용어는 없으며,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도 사업자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할 뿐 소상공인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라는 용어는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1) 박춘엽,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의 이론적 배경”,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8, pp. 193-208.

2) 박동수, “소상공인 경영의 연구명제 탐색”,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논총, 제17집, 2000.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조치법”, 2000년 12월 개정.

정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개념을 일본에서는 소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대상이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칭 속에 포함되어 독특성을 따로 개념화하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쓰였던 명칭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란 양적·질적으로 대기업의 특성을 가지지 않은 모든 기업 혹은 사업체 모두를 일컫는 포괄적 명칭이다. 소상공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법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 - 1>과 같다.

<표 II -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법	
· 헌법 제 123조	제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 중소기업 기본법 (1966)	
· 신용보증 기금법 (1974)	
·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7)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97)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1999)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2000)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헌법 제 123조의 제3항과 제5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기초를 두고 1966년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982년 이전까지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는 복합적인 명칭 아래 제조업, 건설업, 광업 및 운송업의 경우 상시종

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산총액 5억원의 기준 중 양자 택일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1995년 동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1995. 7. 1)」 제2조에서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과 자산총액을 중심으로 한 기준 이내여야 함은 물론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질적 요건을 동시에 적용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다. 현재는 소기업을 보호·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고, 1999년 2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지원계획 수립방법,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서 조치법 제1조 중 “소기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생산활동”을 “기업활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소상공인 적용기준)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동 법 시행령에서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을 주된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 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 ② 제1항에서 “주된 업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을 말한다.
- ③ 제1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 시행령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II 2>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형태의 분류

구 분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300인 미만	50인 미만	10인 미만
건설업	300인 미만	50인 미만	10인 미만
광 업	300인 미만	50인 미만	10인 미만
운수업	300인 미만	50인 미마	10인 미만
기타업종	50인 미만	10인 미만	5인 미만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지원법 해설, 중소기업청(2001년), 연구자 재정리

상시 종업원 수를 가지고 기업의 형태를 구분해 볼 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표 II - 2> 에서 보는 바와 정리 해 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인 음식점 및 숙박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다른 기업의 범주들에 비하여 가장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의 출발이 영세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영세성을 떠면서 기업의 수명은 시작된다고 보면 소상공인 규모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기업의 범주이니 만큼 창업단계에 있으면서 대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소규모로 출발하여 영세성을 계속 유지하며 소상공인으로 남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기업도 창업단계에서는 소자본을 투입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기업을 시작하는 일정기간 동안 규모를 확장하기 전까지는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소규

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⁴⁾ 할 수 있는 데, 이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은 <표 II - 3> 과 같이 조사되고 있다.

<표 II 3>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

업 종	대 상 업 종
개인서비스	세탁소, 미용실, PC방, 비디오 샵, 심부름센터 등
숙박 및 음식업	여관, 음식, 제과점,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등
운수/창고/서비스	여행사, 보관 및 창고업, 주차장, 통신사업 등
자동차 수리	카 센터,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부품 등
부동산/임대서비스	부동산 중개/임대업, 장비임대업, S/W 개발, 변리사, 세무사 등
교육서비스	음악학원, 입시학원, 보습학원, 체육관, 미술학원 등
도·소매	슈퍼, 음식료/담배, 양곡상, 정육점, 어물전, 화장품점, 청과상, 의류, 문구점, 신발소매점, 꽃집, 서점, 음반/테이프 등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 등	

자료 : 중소기업청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 자료 (2003년), 연구자 재 정리

나. 소상공인의 일반적 특성

소상공인은 전통적인 기업속성과 현대적인 기업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자본을 출자한 자본가 소유의 개인적 경제기구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은 한사람으로 운영되는 개인 사업체 및 영세한 규

4) 박동수, 앞의 논문, p. 27.

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근대적 경영시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적경제기구의 성격을 지닌 기업의 경영특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업체의 수나 종사자 수에서 알 수 있다.

<표 II - 4>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사업체 수가 2,864,134개였으며, 이중 소상공인 업체 수는 2,548,026개이며, 전체산업 사업체수의 89%가 소상공인의 기업형태인 개인사업체 및 비법인 단체이다.

<표 II - 4> 한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

(단위 : 개, %)

	1997	%	1998	%	1999	%	2000	%
1~4인	2,337,504	81.9	2,349,133	89.3	2,454,000	88.3	2,484,942	86.8
5~9인	61,499	2.2	52,733	2.0	57,766	2.1	63,084	2.2
소상공인업체수	2,399,003	84.1	2,401,866	91.3	2,511,766	90.4	2,548,026	89.0
전체산업사업체수	2,853,673		2,629,868		2,777,986		2,864,134	

자료 : 소기업·소상공인 기본통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2002. 5)

한국의 소상공인 종업원 수는 <표 II -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기준에서 소상공인 사업자 중 1~4인까지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4,492,430명으로 전체산업 종업원 수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5~9인까지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413,048명으로 전체산업 종업원 수의 3.5%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상공인 수는 4,905,478명으로 전체산업 종업원 수 대비의 4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 5> 한국의 소상공인 종업원 수

(단위 : 명, %)

	1997	%	1998	%	1999	%	2000	%
1~4인	4,121,073	30.6	4,108,678	40.4	4,352,384	40.2	4,492,430	39.0
5~9인	394,832	2.9	339,308	3.3	373,848	3.4	413,048	3.5
소상공인종업원수	4,515,905	33.5	4,447,986	43.7	4,726,232	43.6	4,905,478	42.5
전체산업종업원수	13,470,343		10,177,797		10,829,961		11,530,908	

자료 : 소기업·소상공인 기본통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2002. 5)

소상공인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특성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특성을 보면 소상공인은 3차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가 대부분으로 가장 분포도가 높은 업종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등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전병찬(2000)의 연구와 박정기, 빈봉식(2001)의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연구에서 나타난 소상공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 명의 종사자와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수는 1,000만 명 이상이 된다. 이 숫자는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25% 이상의 경제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은 다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 창업은 고용창출의 역할이 크다. 소상공인은 전체 산업체 종사자의 42.5%를 고용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생활에 활

력을 갖게 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

셋째, 소상공인은 작은 규모로 활동하고 있어 매우 영세하다. 소상공인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는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사업체 한 개당 평균 1.92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중 5명 미만이 8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제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면서 그 규모는 영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기업들과는 달리 규모가 영세하고 생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자금으로 창업을 한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된 총 자본의 규모는 대부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연구에 의하면 5천만원~1억원 미만이 전체의 49.5%이었으며, 1억원 미만은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창업자금의 규모는 7천 6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형태의 소자본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창업자금 조달은 타인자본의 이용도가 높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창업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50% 정도는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융기관, 사금융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담보제공이나 창업투자기관의 투자를 받는 형태는 거의 없다.

여섯째, 업종이 다양하다. 산업 분류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은 도매·소매업이 전체의 33.4%, 숙박 및 음식업이 22.4%, 제조업이 9.8%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이 9.5% 등 업종이 다양하다. 그 외의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특히 대기업의 주 분야인 제조업 분야보다 비제조업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소상공인 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이 커짐은 현대 산업형태의 변화와 흐름에 일치하고 있어 관심과 기대가 크다.

일곱째,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개인기업형이다. <표 II - 4>에서 보면, 1~4인 사업체수가 86.8%(2,484,94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5~9인이 2.2%(63,084개)를 나타내고 있다. 조직의 형태로는 개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절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개인사업체이다. 그리고 실제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사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인이 동일한 형태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여덟째, 종사자가 가족형태를 유지한다. 종사자 지위별로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자영경영주 및 무급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상공인은 가족중심의 기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 한 가족의 절대적인 소득원이라는 측면을 시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제조업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가족기업은 오너경영자가 경영하는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나아가 가족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가족기업만의 독특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승계문제, 전략문제, 재무문제 그리고 가족 자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남영호, 2000)

따라서 소상공인의 특성은 이와 같이 다양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앞으로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중견 및 대기업과의 하청 분업관계에서 부분품을 생산·조립하거나, 생산품의 도·소매 등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다.(박정기, 2001)

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특성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소상공업의 경영상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성과정을 <표 II - 6>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⁵⁾ 즉, 소상공인의 경영상 특성을 경영형태와 경영목적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상공업의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경영형태는 생업형에서 기업형으로 점차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대로 생업적 경영의 유형이 되면 될수록 기업본래의 경영목적인 이윤극대화 내지 경영규모의 확대의욕은 부족하고 그 대신에 자기 및 자기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활의 안정이나 생활충족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관리상 특성을 보면 생계형 경영일수록 가계비와 영업비가 미분리 상태에 있고, 가족을 노동구성원으로 하는 가족 의존도가 높으며, 주거와 사업장이 혼용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상 특성은 생성단계가 높아지거나 기업형 경영일수록 그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표 II - 6> 소상공업의 생성과정과 경영상 특성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제5단계
생성단계별 노동력구성	업주	업주 + 가족종사자	업주 + 가족종사자 + 임금노동자	업주 + 명목적 가족종사자 + 임금노동자	업주 + 관리직종사자 + 임금노동자
경영목적	← 생계유지(생활안정) → ← 이윤확대(기업의 성장발전) →				
경영형태	← 생업적경영 → ← 기업적 경영 →				
경영관리상 특성	· 가계비와 영업비의 미분리, · 가족노동에의 의존, · 주거와 사업장의 혼용 등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생성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개선				

5) 양형진, “기업의 이론적 고찰과 정책적 과제”, 2001년 가을호, 기은조사.

2.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

가. 소상공인 지원의 이론적 배경

소상공인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소기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9년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으로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영위업체나 5인 미만의 음식점 및 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영위업체를 소상공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9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 2조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가, 「소상공인」이라는 정식적인 용어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지원계획 수립방법,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음·숙박업, 세탁업, 부동산 중개업 등의 서비스업 및 가내수공업 등 생업적인 가족형 경영을 하는 소규모의 자영업업을 의미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제조업이나 중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음식점 및 숙박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과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도소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은 개별 단위로서는 대기업이나

6) 한남대학교 경제 및 국제지역 연구소, “대전·충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전략”, 2000, pp. 16-17.

중기업 만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업체 수와 고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근원이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창업되어 소상공인으로서는 기업의 생명을 마감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 이르게 되어 결국 소상공인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 시스템내에 존재하면서 그들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셋째, 소상공인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경제 시스템 내의 창의력을 촉진하면서 효율적인 산업변화를 진행시킬 수 있다.

넷째,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즉 무점포 재택 근무 사업이나 소규모 점포 사업이 급증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소상공인은 SOHO의 발전에 기초해 첨단 기술산업의 성장을 담당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소상공인은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소상공인의 활성화는 지역간 경제격차의 해소에 기여한다. 특히 IMF경제위기 하에서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실업해소, 중산층의 확대 및 사회 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중요한 역할과 함께 소상공인의 창업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다면 생계유지형이 대부분으로 사회 안전망의 구실을 가장 명확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기존 연구자들의 학술적인 이론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지원 사례를 기초로 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결정되었다.

정책적 지원사업 기획당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에 232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서민을 지원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며,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상공인들의 창업·경영지도·각종 정보제공 등을 목표

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상황

(1)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배경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음·숙박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함에 있으며, 또한 IMF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하고 있는 소규모 창업을 발굴·지원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1998년 소상공인 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1999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상담, 각종정보제공 및 자금추천을 주요 기능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그 설치 배경은 IMF 이후 경제악화에 따른 대량 실업 발생과 이에 따른 생계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IMF 금융지원 이후 대기업·금융권의 구조조정, 중견기업의 부도 등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가 일거리를 상실하고 중산층의 붕괴위기 등 사회적 위기상황이 도래하자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계의 곤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국민의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양대 중소기업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2)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첫째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분위기를 고

조하고 창업 제반절차 및 정보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며 둘째 소규모·소자본 창업 및 경영개선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셋째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3)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중소기업청에서 예비창업자와 기존 사업자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 데, 기본적으로 인구를 기본으로 하여 산업적, 지리적 여건을 배려하여 설치하였다. 1999년 2월에 중앙센터 및 13개의 지역센터가 개소되었고, 7월에 16개소가 증설되고, 2000년 6월 지역센터 20개소가 추가 증설되었으며 2003년 6월 현재 중앙센터외 59개의 지역센터와 16개의 분소로 나뉘어져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중소기업청 정책국 소기업과에서 통제하며, 지역센터는 지방 중소기업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인원 선발권은 지방 중소기업청에 있다. 중앙센터에는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다, 그 중 2명이 대학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계사 1인, 경영컨설트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 ②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자문
- ③ 지역센터 설치 장소 선정에 관한 자문
- ④ 중소기업청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지역센터에는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다. 지역센터 운영회의 기능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립 등 중요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⁷⁾

- ① 상담 및 업무대행 (일대일 카운슬링, 서류작성 및 업무 대행)
- ② 경영 및 기술 지도
- ③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 기술이전 및 연계,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소요자금알선)
- ④ 수출지원 (수출시장 개척·발굴, 외국바이어 연결,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여 유도 및 안내, 수출상품 판매 및 생산전략 수립, 수출자금 조달 알선 등)
- ⑤ 조사연구 (소상공업 및 지역경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 ⑥ 정보 제공 (정부의 정책, 규제, 지원제도, 선진 기술정보 등 각종 경영 및 기술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 정보제공센터 설치·운영, 지원시책 안내서 배포 등)
- ⑦ 종합도서관 운영 (소상공업에 관한 종합적인 도서관 운영)
- ⑧ 소상공업지원 자원봉사단 운영 (소상공업에 대한 상담, 지도 등을 위한 자원봉사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운영)
- ⑨ 자금알선 및 추천 (상담 및 지도결과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업을 지원하는 각종 자금-정책자금과 금융기관의 자금을 알선하거나 해당기관에 지원을 추천)
- ⑩ 기타 위 사업에 부대되는 지원과 소상공업의 창업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등

3. 소상공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정부지원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현행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

7) 박준엽, “미국의 SBDC와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9, p. 242.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향후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직 소상공인과 관련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본 장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는 범주와 맞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뿐 해외의 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또 소상공인이라는 정의와 용어를 사용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에 관한 연구는 1998년 6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박춘엽은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제조기업 중심의 중규모 기업 중심이 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지원정책은 한국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처한 현실과 미래의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수립은 한국 중소기업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한정된 수의 제조업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과 좀더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박춘엽은 미국 SBDC⁹⁾와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비교에서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미국의 SBDC를 모델로 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양국 센터의 유사점에 대해 설치배경, 업종, 규모, 서비스내용 등을 비교하였고, 차이점은 센터 설치의 시차, 지원대상, 운영경비, 운영방식, 운영조직, 설치장소, 상담사의 신분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관찰과 논의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8) 박춘엽, 앞의 논문, pp. 193-208.

9)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BDC)는 1980년도 미국에서 설립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인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구이다. 전국에 950개 센터와 53개의 책임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국 평균으로 인구 24만 명당 1개의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병찬 등은 1997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상공인의 분포를 조사하여 그 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의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소상공인의 분포를 ① 산업유형별 ② 종사자특성별 ③ 조직특성별(인원)규모, 형태 및 업체 ④ 기타(종사자 지위 및 지역별 특성 등)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상공인은 가족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4분의1정도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한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소상공인의 기준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규모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로 도·소매업 등은 4인 이하, 제조업 등은 19인 이하가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박춘엽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83.1%가 만족하였다고 하였고, 불만이라는 응답은 2.6%로 극소하였다고 하였다. 만족도에서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상담사의 전문능력, 친절, 자금대출, 서비스가 사업에 도움이 된 정도, 상담사의 사명감에 찬 노력, 인격적 대우, 상담실 분위기, 상담사의 전문지식, 처지에 대한 위로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결과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증설의 타당성을 제시한다고 하였다.¹²⁾

유세준 등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만족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태조사에서 상담사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보수 및 신분 등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고 하였다. 상담사들의 근무

10) 박춘엽, 앞의논문, pp. 251-253.

11) 전병찬 등, “한국의 소상공업 분포와 함축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pp. 147-168.

12) 박춘엽,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pp. 192-193.

조건의 최우선적 개선사항은 신분개선이고, 다음으로 급여인상이라고 하였다. 고객만족을 위해 소점포 창업지원이 가장 강화해야할 서비스이며, 상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강화, 초기교육 강화, 우수한 인력선발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¹³⁾

박동수는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성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창업경영 모형들을 소상공인에 적합하도록 변환시키고, 이들의 상호 작용적 측면들을 통합하는 소상공인 창업·경영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의 정의 및 연구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의 본질과 특성들을 이해하며, 소상공인 사업체 성과의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시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¹⁴⁾ 하지만 이 연구는 소상공 경영학의 필요성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 예측, 통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은 제시하였지만 성공이나 실패요인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두었다.

정성한 등은 소상공인 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성공요인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요인으로 개인특성, 창업자금의 원천과 양, 경영관리요인이 창업사업체의 재무적 성과와 창업자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취욕구가 소상공인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유의한 관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창업자금 조달에서는 창업자금 규모가 월 매출액과 월 순수익에 유의하면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명하였다. 자기자본 비율도 또한 월 순수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명

13) 유세준 등,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사 만족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pp. 348-349.

14) 박동수, 앞의 논문, p. 26.

하였다. 경영관리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만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다른 어떤 경영관리적 요소도 결과 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명하였다. 또 이 연구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되려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을 위해서 무엇이 성공적인 창업을 가능하게 해주고, 무엇이 창업 사업체의 성공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해 주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성공하는 소상공인과 실패하는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박준엽 등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및 목표달성도 제고방안, ②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 개선, ③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추천서의 실효율 최소화 방안, ④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조건 및 대상 합리화 도모, ⑤ 지원대상의 확대, ⑥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개선된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로 ① 정책목표 달성, ② 고객만족도 증대, ③ 효율성 제고, ④ 합리적 시스템 운영, ⑤ 지원의 확대, ⑥ 부실채권 예방이 있어야 하며, 개선과제를 해결하고 개선된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강화, ② 지원조건 개선, ③ 부분보증 비율조정, ④ 업무취급 중심기관을 은행으로 ⑤ 다양한 대출프로그램 개발, ⑥ 재원확보, ⑦ 사후관리체제 강화, ⑧ 신용보증기관의 서비스 개선, ⑨ 대출기관의 서비스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¹⁶⁾

빈봉식과 박정기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창업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절차와 검토가 필요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소상공인의 창업은 성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질적인 내실화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 개인의 여

15) 정성한 등, “소상공인 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2회 전국소상공인 창업·경영학술대회발표 논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 중앙센터, 2000, pp. 48-50.

16) 박준엽 등,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청 제출보고서, 2000.

건과 특성이 맞는 창업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친 후 창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들은 부산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이용한 소상공인의 만족도는 88.2%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불만은 3.6%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상담사의 전문적인 상담능력, 친절, 자금지원 등이 가장 만족한 요인이었으며, 그 외 인격적 대우, 상담분위기, 내담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로 등도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소상공인에게 현재보다 더 만족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실의 조건, 제조·벤처기업의 서비스강화, 자금추천 후 보증서발급의 탄력적 운용의 지원, 상담사의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자원봉사자나 창업도우미업체 활용을 위한 인력풀(pool)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

박춘엽 등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에 있어서 대출서류의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 지원대상의 합리성, 대출조건의 합리성, 대출추천 실효율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체계는 현행 운영방식의 개선 및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개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증대 및 업무처리과정 등을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외에 소상공인 자금지원대상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자금추천기준을 강화하여 대출성공율 향상, 추천신청 자제 유도 등을 통한 자금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¹⁹⁾

김석진 등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에서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된 절차, 특정 보증기관에 취

17) 빈봉식, 박정기, “부산지역 소상공인 창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4집, 인문·사회과학편, 2001, p.556.

18) 빈봉식, 박정기,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의논집, 제35집, 인문·사회과학편, 동의대학교, 2001, p.331-332.

19) 박춘엽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1, pp 78-81.

급편중, 대출시기의 부적절, 연대보증인의 요구 및 금액감면, 전액보증에 따른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지정된 용도 외 사용가능성,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금 부실화, 심사관련 기준의 비공개, 소액단기 대출의 우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경영컨설팅기관을 지양하고,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 보증제도를 도입하며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기금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실시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의 지원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 전체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0) 김석진 등,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p. 147-152.

Ⅲ.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

가. 창업 및 경영지도 부문

창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고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창업 및 경영상담을 하고 있으며, 창업 또는 업종 변경 시 관련기술 습득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창업 및 경영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핵심 원인을 도출해내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책분석 등 경영, 기술상의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기술진단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지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상담이라고 하면 창업 아이템 선정방법, 창업절차 및 인허가, 상권분석 및 입지평가, 창업 기술 전수,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에 관한 상담을 말하고 경영상담이라고 말하면 업종전환, 마케팅, 인사, 재무 등 경영지도부문과 운영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상담 등을 말한다.

<표 III - 1> 소상공인 지원 분야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년 도	구분	합 계	창 업	경 영	정 보
1999년	건수 (비율)	115,738 (100%)	68,847 (59.4%)	38,762 (33.5%)	8,129 (7.1%)
2000년	건수 (비율)	253,147 (100%)	142,598 (56.3%)	69,210 (27.3%)	41,339 (16.4%)
2001년	건수 (비율)	315,028 (100%)	163,834 (52%)	92,448 (29.4%)	58,746 (18.6%)
2002년 6월	건수 (비율)	161,399 (100%)	83,957 (52.0%)	47,194 (29.2%)	30,248 (18.8%)
계	건수 (비율)	845,312 (100%)	459,236 (54.3%)	247,614 (29.3%)	138,462 (16.4%)

자료 : 중소기업 관련통계, 중소기업청(2002), 연구자 재 정리

1999년 2월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분위기를 고조하고 창업 제반절차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을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고, 소규모·소자본 창업 및 경영개선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며 이외에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활발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Ⅲ - 1> 에서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1999년 2월 개소한 이래 2002년 6월말 현재까지 84만 5,312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총 상담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은 창업상담으로 전체 상담 건수 중 54.3%로 45만 9,236건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경영상담이 29.3%, 정보상담이 16.4%를 차지하였다. 만약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상담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예 상담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도입된 제도로써 그 당시 가장 현실적인 필요성을 갖게 하는 분야가 고용창출이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미친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용창출 실적을 살펴보면 <표 Ⅲ - 2>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된 이후 2002년 5월말 현재까지 8만 5,446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는 창업지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통하여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는 데, 이러한 고용유지의 인원은 5만 3,032 명으로 추정된다.

<표 III 2> 고용효과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고 용 장 축						고용유지	
			소 계		창업업체		기존업체			
	업 체 수	인 원	업 체 수	인 원	업 체 수	인 원	업 체 수	인 원	업 체 수	인 원
1999년	11,641	28,283	7,458	17,883	6,474	16,002	984	1,881	4,183	10,400
2000년	14,978	36,771	10,695	25,987	9,670	24,298	1,025	1,689	4,283	10,784
2001년	18,743	47,186	14,514	36,067	13,459	34,317	1,055	1,750	4,229	11,119
2002.5월	10,910	26,238	2,737	5,509	1,661	2,713	1,076	2,796	8,173	20,729
계	56,272	138,478	35,404	85,446	31,264	77,330	4,140	8,116	20,868	53,032

자료 : 중소기업 관련통계, 중소기업청(2002), 연구자 재 정리

참고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 업무실적 중 전국의 상담현황은 월 평균 상담실적은 센터별 약 484건, 상담사별 1인당 월 평균 약 116건의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²¹⁾ 경영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센터에서 개발한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의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업의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 표준진단모델 정립 및 소상공업 경영지수(SBMI : Small Business Management Index)를 진단하여 소상공업의 경영표준을 정립하고자 기존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종선택과 창업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 창업

21) '03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센터 주요 업무실적 통계,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 200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및 창업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소상공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출증대 및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경영일반 분야의 인사, 조직, 재무(세무), 생산, 마케팅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으로는 일반창업, 벤처창업, SOHO창업, 소자본 창업, 여성창업, 외식업창업, 무역업창업 등의 과정이 있고 교육내용에는 창업준비 및 절차, 창업아이템 선정전략, 입지 및 상권분석, 창업 적성검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 프랜차이즈 창업, 창업자금 지원제도 및 조달방법, 창업세무, 소점포 마케팅, SOHO 창업전략, E-Business 전략, 부동산 계약실무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점포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창업실무 등 소상공인이 창업 시 필요한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 -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1999년 2월 개소 이후 2002년 6월말 현재까지 2,843회에 걸쳐서 34만 7,892 명에게 창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만 5,370 회에 걸쳐서 2만 8,139 명에게 경영지도와 관련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04 건의 창업 가이드 및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전국에 3,613건의 상권을 분석하여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1,431개의 창업 도우미 업체를 지정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상담은 물론, 관련 업종을 운영중인 사업주와 입체적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 전개로 여성창업, 부부창업, 청년창업, 실버창업 등 창업관련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소년원생 등 특수사회계층에 대한 교육도 계속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하여 소정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공단에서는 연 3%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출소예정 소년원생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비

즈쿨²²⁾ 창업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관의 창업자금 수혜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 및 사업성타당성 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여성부,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자활 후원기관 협회 등과 창업 관련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각 부처의 창업업무 수행기관과 창업 업무를 협력, 지원 중에 있다.

최근에는 사단법인 “선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탈북자 창업교육 전문기관인 굿-피플 대학과 탈북자 창업지원 협력을 계획 중에 있고 향후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사업자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들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III 3>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현황

(단위 : 회, 명, 종, 지역)

년 도	창 업 교 육		현 장 지 도		창업 가이드	상권분석 (지역)	창업 도우미
	회수	참석인원	회수	대상인원			
1999년	620	107,593	3,619	11,721	280	1,465	0
2000년	621	46,944	3,138	4,261	255	778	863
2001년	928	104,569	5,434	8,197	226	1,370	401
2002.6월	674	88,786	3,179	3,960	143	0	167
계	2,843	347,892	15,370	28,139	904	3,613	1,431

자료 : 중소기업 관련통계, 중소기업청(2002), 연구자 재정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표 III - 4>에서와 같이 그동안 창업관련 상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자영업체에 대한 경영지도나 개선에 소홀했던 점을 대폭

22)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 -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

수정해 기존 창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경영진단이 필요 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존 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희망할 경우 리스타트(Re - Start)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기업을 인수, 재 창업하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주요 100대 상권의 조사한 내용을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해서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상 권 및 입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창업 교육과 관련되어 운영되 고 있는 10개 과목정도의 사이버 강좌를 점차적으로 40-50개 강좌로 확대하는 방 안도 추진 중에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현재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발행하는 정책자금 추천서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될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 책자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되고 신용보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할 예정이다.

<표 III 4> 2003년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점 추진업무

중 점 추 진 업 무	비 고
경영안정 중점지원	경영진단 프로그램
리스타트(Re Start) 프로그램 운영	
정보기능 강화	
전국 주요 100대 상권조사 및 자료 제공	홈페이지에 제공 중
사이버 강좌 확대	홈페이지에 제공 중
신용평가모델 등을 통한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강화	

자료 : 소상공인 창업·경영 학술대회 자료, 중앙센터(2003), 연구자 재 정리

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한국의 소상공인 업체수는 제 II 장 < 표 II - 4>에서와 같이 2000년말 기준으로 업체로 전 사업체수 2,864,134에서 2,548,026개 업체로 89%를 차지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업체의 종사자수는 전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총 종사자수 11,530,908명 가운데 약42.5%인 4,905,478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소상공업 업체당 평균종사자수는 1.9명으로 소상공업이 매우 영세함을 확인시키는 지표이다.

전체 산업구조별로 살펴보면, 3차 산업의 사업체수 비중이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업체의 경우도 3차 산업이 87.6%로서(전병찬, 김정대, 박춘엽, 2000)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업의 광공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19.3%로 전체산업구조보다 낮다. 이와 같이 전체 산업별 구조 및 전체 사업체 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된 1999년에 최초로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당초 소요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가, 소상공업 창업에 따른 현실적 창업비용을 감안하여 현재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도 1999년 당시 연리 8.0%에서 현재 5.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상환기간은 1999년 초기에는 6개월 거치 2년 6개월 상환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바뀌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현황은 <표 III - 5>에서와 같이 1999년 2월 개소 이후 2002년말 5월 말까지 10만 3,582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천하여 4

만 9,754 건의 대출이 실행되어 금액상으로는 1조 1,600억원이 지원되었는 데, 이러한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없었다면 실제로 지원이 불가능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채권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실행건수 49,754 건수 중 67%인 33,338 건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그리고 부동산 담보가 19.6%로 9,754건이며, 신용대출이 13.4%로 6,662건 실행되어 신용으로 대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 -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채권 보전별 실적					
			담보		신용		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9년	14,613 (100)	300,000 (100)	2,338 (16.0)	59,976 (20.0)	1,688 (11.6)	28,526 (9.5)	10,587 (72.4)	211,498 (70.5)
2000년	10,518 (100)	240,000 (100)	2,090 (19.9)	68,685 (28.6)	1,456 (13.8)	26,367 (11.0)	6,972 (66.3)	144,948 (60.4)
2001년	14,313 (100)	370,000 (100)	4,394 (30.7)	161,690 (43.7)	2,424 (16.9)	48,100 (13.0)	7,495 (52.4)	160,210 (43.3)
2002.5월	10,310 (100)	250,000 (100)	932 (9.0)	32,526 (13.0)	1,094 (10.6)	22,720 (9.1)	8,284 (80.4)	194,754 (77.9)
계	49,754 (100)	1,160,000 (100%)	9,754 (19.6)	322,877 (27.8)	6,662 (13.4)	125,713 (10.8)	33,338 (67.0)	711,410 (61.4)

※ () 내는 비중

자료 : 소상공인 자금지원 관련통계, 중소기업청(2002), 연구자 재처리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체계와 절차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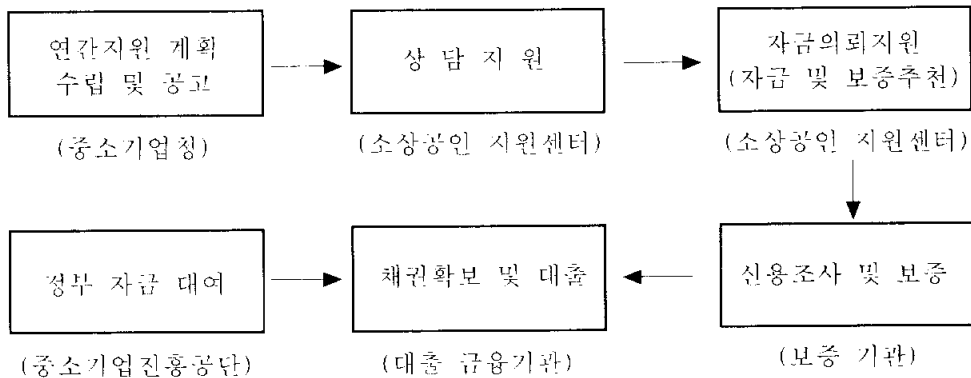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체계는 <그림 III - 1>과 같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은 중소기업청에서 이루어지고, 자금신청 및 추천의 일련의 과정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금대여의 역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맡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자금취급금융기관 약정서를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대여방식은 월별로 일괄대여로 하되, 한도소진 시 추가대여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배정된 자금을 예비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에 대하여 50:50으로 추천하고자 노력중이나, 실제로는 창업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자금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고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의 미이행분과 자금지원 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배정금액 대비 약 130%를 추천하는 등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책임 하에 배정된 정책자금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실적보고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집행실적을 월1회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지역센터장은 대출현황을 지방청장과 중앙센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지원실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자금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방지와 지속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영의 개선과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지도를 해야 한다.

<그림 III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 결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는 금융기관의 불량 거래자와 불량 거래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및 기타 신규창업·사업확대 및 전환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5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현재 금리는 5.9%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까지이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대출금액의 70%은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절차는 <그림 III - 2>에서와 같이 상담단계, 추천단계, 신용보증 단계, 대출실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의 다섯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정책자금 추천절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절차, 금융기관의 대출단계가 중요한 3단계라 볼 수 있다.

첫번째 상담단계는 전국에 59개소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창업 및 경영상담을 할 수 있다. 제 II 장에서 정의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상담, FAX,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사가 적극적인 상담을 해주고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금추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두번째, 추천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서 발급추천 신청서 또는 소상공인 자금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사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추천을 하게 되며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자금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자금 지원 추천절차를 받게 된다. 정책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신청기간은 정부의 정책자금 소진 시까지 하며, 정책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사는 신청인의 경영능력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55점 이상인 경우에 대출을 취급하도록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 때 필요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세번째, 신용보증서 발급단계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보증서 발급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상담을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한다. 거절 사유가 없으면, 신용보증서발급 신청을 받아드려 신용조사를 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조사는 소액심사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외에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은 서울의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4개가 있으며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상담결과 부동산 담보가 취약하던지, 신용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각 지역별 신용보증기관에 “신용보증서발급 추천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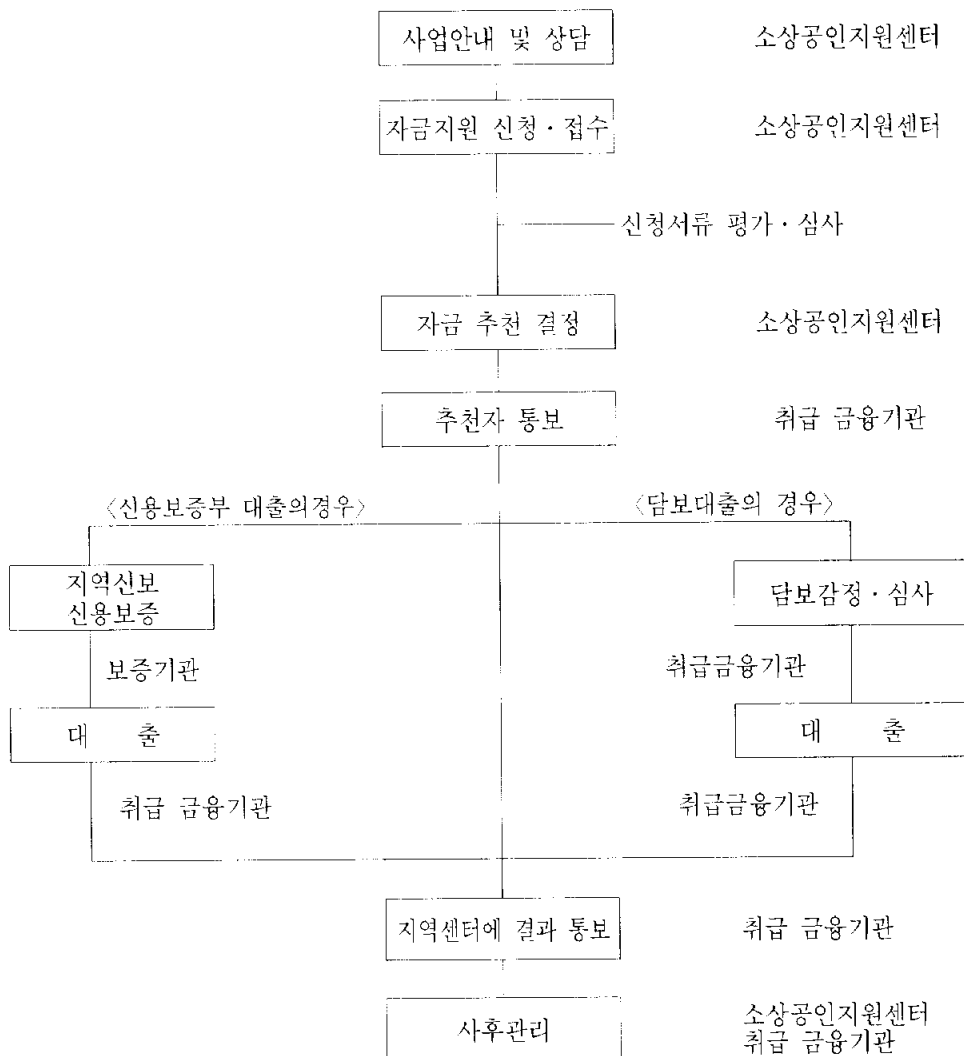
네번째, 대출실행 단계는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 이러한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국민·농협중앙회·경남·기업·한미·부산·하나·외환·신한·조흥·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책자금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추천서를 발급하며 대출금융기관에서는 추천서의 사본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팀으로 송부한다.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추천서가 접수되면 해당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우선으로 추천서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지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출 취급익일까지 추천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대출을 위한 자금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총괄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기한 모든 대출기관과 사전에 약정서를 체결하여 은행별 자금을 배분하고 각 지역센터는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다섯번째는,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집행실적을 매월 1회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이와는 별도로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대출현황을 지방청장과 중앙 센터에 매주 1회씩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후보고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청장은 자금추천 및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각 지역센터는 자금지원 후 사업초기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경영지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경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역센터는 경영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유용하거나 불법사용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

출자금의 조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체계와 절차를 통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매년 증가하여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II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절차



참고로, <표 III - 6>에서와 같이 200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중 업종별 수혜업종을 보면 미용실, 인터넷 게임방, 슈퍼마켓, 의류점, 음식점 등이 수혜업종 Best 10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앞장에서 설명되어진 소상공인의 특성 즉, 도·소매업, 음·숙박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대부분인 기존의 조사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III - 6> 2002년도 정책자금 지원 업종별 수혜 업종 Best10

순위	업 종	순위	업 종
1	미용실	6	치킨전문점
2	인터넷 게임방	7	한정식
3	슈퍼마켓	8	경양식
4	여성의류 소매점	9	돼지고기 요리점
5	백반 전문점	10	닭 요리점

자료 : 소상공인 창업·경영 학술대회 자료, 중앙센터(2003), 연구자 재리

2. 외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

가. 미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1) 소기업지원제도의 주요내용

한국에서 1999년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1980년도에 미국에 설치된 SBD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기본 모형으로 설립되었다.²³⁾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미국의 SBDC와 같은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할 때 소기업

23) 박준엽, 앞의 논문, pp. 237-249.

(Small Business)과 그렇지 않은 그룹(대기업, 소기업은 정의되어 있으나 대기업에 대한 명시적 정의는 없으므로 소기업이 아닌 것은 대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의 Small Business에 해당하는 규모의 기업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중소기업이라 하여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에는 Small Business 라는 기업군을 동 아시아권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세분하여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라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동 아시아권의 중소기업 개념도 Small Business 와 같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에는 중소기업의 일부로서 소상공인이라는 그룹을 따로 정하여 지원하는 바는 없다. 하지만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Small Business Policy)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기업에 대한 배려가 많다.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시책으로서, 소수민족의 소기업 (Minority Business) 및 여성기업 (Woman-Owned Business)에 대한 지원 등이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1970년대 이후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기 쉬운 소기업에 대하여 특별 자금지원, 경영과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기 쉬운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는 미국 중소기업 정책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1970년대부터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SBDC는 이러한 미국의 소기업 정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미국에서 SBDC가 설립되게 된 배경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대기업에 비교하

여 중소기업의 역할은 고용 창출, 혁신의 촉진,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 촉진 등에서 우월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데, 미국에서 SBDC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역할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도에 SBDC가 설치되기 전의 미국 경제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에서 제조업의 고용 기여도가 1950년 중반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1956년에 제조업의 고용 기여도는 33%에서 1980년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995).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조업이 감당할 수 없게된 일자리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과 서비스 기업에 의하여 창출되고 있었다.

둘째는 미국은 1973년과 1980년도의 2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을 겪으며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고 있었다. 1975년 및 1980년도 미국의 실업률은 각각 8.5%와 7.1% (United States Statistical Abstracts, 1996)로서 절대치로서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당시 유럽의 공업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실업률이었다. 이와 같이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세 번째로 미국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말에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등과 같은 미래학자들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예측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이 대기업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므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은 1980년에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Act 를 제정하고 SBDC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소기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데 미국의 SBDC는 모든 중소기업 (Small Business) 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표 III - 7>과 같다. (SBDC법 202조(c) 절 (3)항) 그리고 미국의 SBDC는 책임센터 (Leading Center)와 보통 센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책임센터는 대략 한 주에 한 개꼴로 전국에 모두 53개가 있는 데, 관할 구역에 있는 SBDC를 관장한다. 책임센터도 보통 센터와 같이 대민 봉사를 수행한다.

미국의 SBDC의 설치 기관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4년제, 2년제), 주 정부 기구, 주 정부가 설치한 개발 기구, 주 정부가 투자한 은행, 또는 두 개 이상의 이들 기구가 연합하여 만든 조직 등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유의할 만한 점이다. 설치기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설치기관이 대학이라는 점이다. 대학은 전체 설치 기관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설치 기관은 직원 선발권을 갖는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비교해보면 <표 III - 7>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I 7> 한국과 미국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비교

구분	미국의 SBDC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비교
설치근거	SBDC Act Of 1980	서정지 국민화의 소상공인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행	미국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 한국은 시범 사업
경제 사회적 배경	실업의 증대,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 감소,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 정보화 등에 부응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 특히 1973, 1980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 구조 변동, 대량 실업 문제 등이 심각 해짐	1997년 11월에 시작된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서비스, 유통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	양국 모두 실업의 증대,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 약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설치
설치시기	1980년	1999년 2월 14개 센터로 출발	19년의 시차
주요기능	1. 개별상담 2. 기술 이전, 연구, 기존 자원과의 연계 3. 규제 사항 정보와 대응 방법에 관한 정보 4. 규제에 순응하기 위한 상담과 기술 개발 지원 5.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수행 및 조정 6. 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7. 투자 및 법률회사, 지역의 컨설턴트 등과 교류 8.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서베이의 실시 9. 지역 컨설턴트의 명단 관리	1. 상담 및 업무대행 2. 경영 및 기술지도 3. 기술개발지원 4. 수출지원 5. 소상공업 및 지역경제 조사 연구 6. 정보제공 7.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 8. 소상공업에 관한 도서관 운영 9. 소상공업 지원 자원봉사단 운영 10. 자금 앞선 및 추천 11. 기타 필요시 부대되는 사업	규정상으로는 비슷하나 한국은 역사가 짧아서 아직 실행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음
센터별 기능	책임센터 : 지역 센터 통제 협력 보통센터 : 상담, 경영, 기술 지원	중앙센터 : 공동애로 사항 해결, 교육, 서비스 개발 지역센터 : 상담, 경영 기술지원	미국은 리더센터, 한국은 중앙센터 설치
지원대상	모든 소기업 (Small Business)	소상공업 (제조, 건설, 광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타업종 5인 미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 지원
통제방식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실행에 자율권을 부여 (보조사업 방식)	중소기업청 정책국 소기업과 및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통제 예산편성 및 집행, 직원 임면	미국은 간접 통제 한국은 직접 통제
자금지원	연방 정부가 총 소요자금의 50% 지원, 나머지 50%는 지방 정부 후원금, 자체 조달, 1998년 연방정부 지원금 센터당 평균 9억원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 1999년 센터당 평균 3억 5,700원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50% 지원 한국은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자문 위원회	9인의 SBA 자문 위원, 교수는 3인 이내, 6인 업계 대표	중앙센터 자문 위원 10인 이내 지방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	한국은 자문위가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2)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제도²⁴⁾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같은 그룹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Micro Business(영세기업) 및 소액대출에 대한 제도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전체 속에서 특별히 소액대출,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은 미국 전체 GNP의 39%를 생산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중소기업은 미국 전체 고용인원의 53.5%를 담당하는 미국의 풀뿌리 자본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국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을 통한 다양한 자금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한국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영세기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원호대상자, 여성과 소수민족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자본 형성과 경제성장 및 취업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자금지원에 있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제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출기관에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장하는 신용보증업무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자금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신뢰도를 높여가며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책임지고 보장하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

24) 박준엽 등, 앞의 보고서, pp. 8-17.

다. 미국정부가 보는 소액 자금지원(Micro Loan Financing)의 목적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정책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기본적인 하부구조로서 풀뿌리 자본주의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들의 전략적인 육성정책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갖는 벤처형 창업 정신이 미국 경제에 창의적인 역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 후생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형평성 있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의 시각이다.

이러한 정책방향 중에서도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세 번째 사항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생활비에 해당하는 식품권(Food Stamp)이나 최저생활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생활보조에 이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극빈층이 자립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최극빈층의 긴급 소액대출(Express Micro Loan Financing)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매우 폭넓은 시각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기구의 참여에 의하여 매우 활발하게 소액대출이 제도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밖에도 미국의 대외협력처(USAID)를 비롯한 정부의 각 산하기관은 물론, 많은 주정부 및 자치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기관들도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풀뿌리 자본주의가 비교적 잘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SBA(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제도

미국의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자금대출

보다는 보증에 의한 간접대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보증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자금지원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액분산의 정책적 기조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집중적 육성정책의 기조와 대조를 이룬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단계별 자금지원은 최초의 대출은 \$100에서 \$5,000에 이르는 매우 적은 규모로 시작되는 경우도 상당부분이며 지원자금의 회수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점차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단계별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소액대출(Micro Loan)의 규모는 \$10,000(1,200만원상당)이며 최장 6년간의 상환기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대출상환시기는 자금의 종류, 규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최초의 1년 정도는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유예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자율도 자금기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기준이자율(Prime Rate)에 2-3%를 붙이는 정도로 시중이자율보다는 현격하게 낮다.

지원대상은 소수의 투기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문호가 열렸으며 그 기준으로 \$6,000,000이하의 자산규모와 \$2,000,000이하의 연간소득규모를 병행하여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대체적 기준안(Alternate Standard Ruling)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대개 비영리법인이 보통이며 각 기관에 따라 대출자격과 요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보와 같은 물적 보증과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신용 보증이 포함되기도 한다.

소규모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청과 소액대출을 취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은 보증지원의 규모를 할당하며 각 금융기관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금신청자(기업인)는 먼저 관련 소기업지원센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한도에 대한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1차 서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 1년간의 월별 자금흐름표, 예상수지표), 창업자 및 20%이상 지분소유자의 개인 재무보고서(Personal Financial Statement), 대출자금의 세부 활용계획서, 담보물의 감정서류 및 담보권 등 이와 관련된 서류, 사업계획서와 대표의 이력서, 부채 상황, 채권 및 채무관계의 변동계획서, 최근 3년간 개인 및 기업의 납세실적,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기타 경영관련 계약서 등의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자금지원의 종류

자금지원의 종류로는 7(A) 대출보증 프로그램 (Loan Guaranty Program), 간편서류 대출 프로그램 (Low Doc Program), Micro Loan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7(A) 대출보증 프로그램 (Loan Guaranty Program)은 중소기업청의 가장 중요한 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이 자산의 구입 및 개선, 기초 부채의 처리, 운전자본의 조달에 활용된다. 보증은 전체 대출금의 75% (단, \$100,000미만의 경우 80%까지) 이며, 보증한도액은 \$750,000이다. 대출금 총액은 제한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1,000,000까지만 대출하고 있다. 이용 자격 조건은 중소기업청이 산업별로 정한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7(A)프로그램은 일반대출 보증 외에 7(A)11 프로그램, 재향군인회 프로그램,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계약지원 프로그램, 에너지 절약대출 프로그램, 피고용자 위탁지원 프로그램, 오염 통제대출 프로그램, 국제무역 지원대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우선적 보증 프로그램을 제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간편서류 대출 프로그램 (Low Doc Program)은 복잡한 절차 수행에서 야기되는 소규모 기업의 자금 활용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들이 보증서류 준비의 간소화 방안에 대한 실험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크게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간편 서류 대출 프로그램은 \$150,000까지 확대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SBA)은 간편 서류 대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를 한 곳으로 집중하였고, 보증 요청에 대하여 36시간 내에 회신을 주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청(SBA)의 이와 같은 간편 서류 대출제도는 기업들의 서류를 간단히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간편 서류 대출 제도로 말미암아 대출기관들은 서류 준비가 간단해져서 소액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감소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시범프로그램(Micro Loan Demonstration Program)은 미국의 공법102-104호 609(h)조로 1991년 10월에 발효, 1992년 9월에 대폭 개정되었다. 소액대출은 6년 이하의 단기 운용이 원칙으로 이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고,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미국 뉴욕의 우대 기준금리(Prime Rate)에 2.25~2.75%의 가산금리를 추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SBA)은 1992년에 영세한 기업들, 특히 자본을 구하기 어려운 여성기업, 소수 민족기업, 저소득층 기업 등을 위하여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 Loan Program)을 신설하고 편모 가장여성과 창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실시하였다. 이것은 중소기업청(SBA)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업주가 되게 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00 이하에서 최대 \$25,000까지(평균 \$10,000)를 대출해 주고 기술지원과 상담을 실시한다.

자금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청(SBA)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이 비영리 단체들은 사업자들에게 기술과 경영지원을 한다. 이와 같은 자금은 현재 연간 \$17,000,000이다. 이 프로그램은 북부에 있는 소수의 도시들에서 시험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단체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과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매우 높다.

SBA는 현 35개의 도시에서 이 마이크로 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기구들은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이 기관들은 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자격조건은 업종 제한은 없지만 SBA가 정한 여섯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기업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자금용도는 기계, 장치 및 설비의 구입, 상품, 소모품 등의 구입과 운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부채의 상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용자 조건은 6년 이내 최단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뉴욕의 우대 기준금리보다 4%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신용조건은 좋은 품성과 기업 성공에 필요한 경영능력과 결심이 있음을 인정 받아야 한다. 담보조건은 이 마이크로 대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결정하지만 용자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담보로 잡아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주의 개인적 보증이 요구된다. 대출을 위한 대표적인 구비서류는 자금지원 기관에 대한 대출신청서와 중소기업청이나 소기업지원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자금지원 보증신청서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지원의 최대기구는 미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결집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지원센터라 할 수 있다.

전국에 950개소나 되는 그물 같은 이들 기관은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500의 최소대출부터 시작하여 \$100,000이하의 다양한 대출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계층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단계별 대출이다. 단계별 자금지원은 기업들의 자금지원에 따른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대출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일본의 중소기업 기본법은 기본원리와 중소기업 정책원리에 대한 정의와 규칙, 그리고 지방 및 중앙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

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은 <표 Ⅲ - 8>과 <표 Ⅲ - 9> 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asic Law)에 의해 각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Ⅲ - 8> 일본의 중소기업의 정의(범위)

구 분	제조업 기타	총판매(도매)	소 매 업	서비스업
자 본	300백만엔 이하	100백만엔 이하	50백만엔 이하	50백만엔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	10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자료 : 중소기업시책 총람, 일본 중소기업청 (평성 12년)

<표 Ⅲ - 9> 일본의 소규모 기업의 범위

제조업과 기타	상업과 서비스업
20인 이하	5인 이하

최근 일본은 중소기업을 일본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고용 및 신산업 창출 효과 및 일본경제 재건을 위한 활력소로 인식하여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IT혁명에의 적응, 지원체계의 지속적 개선, 창업과 경영혁신의 촉진, 도심지 (City Centers) 및 중소 도,소매 부문 재건 등 몇가지 경영기반 증진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지원의 기본 개념을 “경제활력을 위한 폭넓은 범주의 독립적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두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지원 체계를 ① 경영혁신과 창업에 대한 자조 노력에 대한 지원, ② 경영기반의 강화 및 경영자원의 증진, ③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원활화, ④ 금융과 조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행체계의 기본 철학을 “민간 부문 능력의 적극적인

활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의 적절한 분담”에 두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을 1999년 개정하면서, 기존의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를 강조하던 것에서 생산 및 설비의 합리화를 통한 「개별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여건의 정비,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 및 기술의 공유 등 조직화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변화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방향 변화를 반영하여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금조달과 담보능력에서 사업활동의 불리함을 보완하는 경영기반 강화, 둘째, 창업, 근대화, 고도화, 국제화, 노동 및 기술력 향상, 유통합리화,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지원과 같이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 지원, 셋째, 영세중소기업의 담보능력과 경영능력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대책, 넷째,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재해보상 및 복구지원, 사양산업, 특정지역, 전통산업 등 특정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 등의 추진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은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탈피를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즉,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 및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시책의 개발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의 도입, 영세 소규모기업에 대한 설비대여제도, 벤처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엔젤세제의 도입, 그리고 전국 20여 개의 중소기업 지역서비스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주요 지원제도는 <표 III - 10>과 같이 ① 경영개선 보급사업, ② 기반시설사업, ③ 연대사업, ④ 소규모기

업자 설비 보조, ⑤ 소규모 기업공제, ⑥ 일반대책 등이 있다.

<표 III 10> 일본 소기업 지원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경영개선 보급사업	· 지도·상담사업, 기장지도사업 · 경영·기술강화 지원사업 · 인터넷활용정보교류 사업 · 소규모기업활성화 사업 · 지역진흥 개발사업 · 지역산업인재육성·지도사업	
기반시설사업	· 상점가·상업집적 활성화 시설 정비보조금 ·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보조금 · 중소기업고도화 융자금 · 전국단체채무보증 사업 · 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	
연대사업	· 중소기업신용보험 사업	
소규모기업자 설비 보조	· 소규모기업 설비자금 제도	
소규모기업공제	· 소규모기업 공제 사업	
일반대책	· 소규모기업경영자원강화, 대책보조금 · 소기업경영 개선자금 융자	

자료 : 중소기업시책 총람, 일본 중소기업청 (평성12년)

(2) 소규모 사업자 지원제도

소규모 거래와 종업원 수가 적은 소규모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특히 심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적인 시책 이외에 특별한 지원 시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의 소규모 기업시책은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 결집하

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소규모 기업시책은 경영지도·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중추적 실시기관인 상공회·상공회의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소규모기업의 상담·지도를 중심으로 한 경영개선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²⁵⁾

① 기반시설사업

소기업의 경영기반이 되는 시설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사업의 집단화, 공동화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 근대화의 촉진에 관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경험적 학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공업의 종합적 개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공회의소 등이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공동공장, 공동점포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 및 「고도화 융자」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등이 채무를 보증하며, 기반시설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사업소세 및 특별 토지 보유세를 비과세하고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등을 경감해 준다.

② 소기업 경영개선 지원제도

영세소기업은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기장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통상적으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곤란하므로 특별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장기저리의 설비·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6개월 이전부터 경

25)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시책 총람”, 평성 12년, pp. 334-358.

영지도원의 지도를 받고 있는 소기업, 최근 2년 이상 동일한 상공회·상공회의소의 지구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담보 또는 보증에 관한 여력이 있고 다른 금융제도의 이용이 확실히 가능한 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사업자당 한도액이 1,000 만엔이고, 금리는 3.85%이며, 대부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6년 이내, 운전자금의 경우 4년 이내로 무담보·무보증이다

③ 설비근대화 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곤란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근대화, 합리화를 위한 설비근대화 자금 대부제도는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조성」에 의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자금을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대출 대상기업은 매년도 통상성이 지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통상산업국장의 승인을 얻어 각 시·도지사가 지원하는 지방산업진흥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 주로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대상설비는 매년도 통상성이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원하는 지방산업 진흥업종에 속하는 설비로 대부한도액 및 대부율은 소요자금의 2분의1내에서 기업당 4천만엔까지 대부를 한다. 연대보증인 또는 물적담보가 필요하며, 무이자로 상환기간은 5~12년이다.

④ 설비대여 제도

설비취득에 필요한 소요자금 전액을 주선하고 설비를 대여해 줌으로써 설비 도입에 따른 소기업의 자금부담을 크게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써 설비근대화 자금 대부제도가 소요자금의 2분의1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소기업이 이용 곤란한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대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액 출자한 설비대여기관이 설비를 대여하고, 자금지원은 “설비근대화자금 대부 제도”를 통해 1/2, 설비대여기관이 중소기업금융공고 등에 주선하여 나머지 1/2

을 지원하고 있다.

⑤ 소규모기업 공제제도

소규모 사업자의 폐업, 사망, 임직원의 퇴직 등에 대비한 공제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복지증진과 소규모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규모기업공제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격은 상시 종업원 20인(서비스업은 5인) 이하 기업의 개인사업주, 회사, 조합 및 협업조합의 임직원이며, 부금은 월 1,000엔부터 최고한도 7만엔 까지 500엔 단위로 자유로 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3.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문제점

가.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

우리경제는 과거 개발·성장기 시대에 경제정책의 모태였던 대기업 위주의 양적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제도적인 관행으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는 등 새로운 경제의 시대적 조류에 대처하지 못하다가 많은 대가와 손실을 치렀다. 이와 같이 1997년 말의 IMF경제체제 이후 우리경제는 과거 성장시대의 제도적 관행으로 인한 경제 체제 및 운영의 경직성에 기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으며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현상은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²⁶⁾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과거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작업, 즉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 구

26) 최숙희,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년, p. 123.

조조정 등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단시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의 불투명한 국제환경이 우리 경제운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기회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IMF체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은 소상공업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 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표 II - 4 및 II - 5>, 사업체 수에서는 89%, 고용(종사자 수)에서는 4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정책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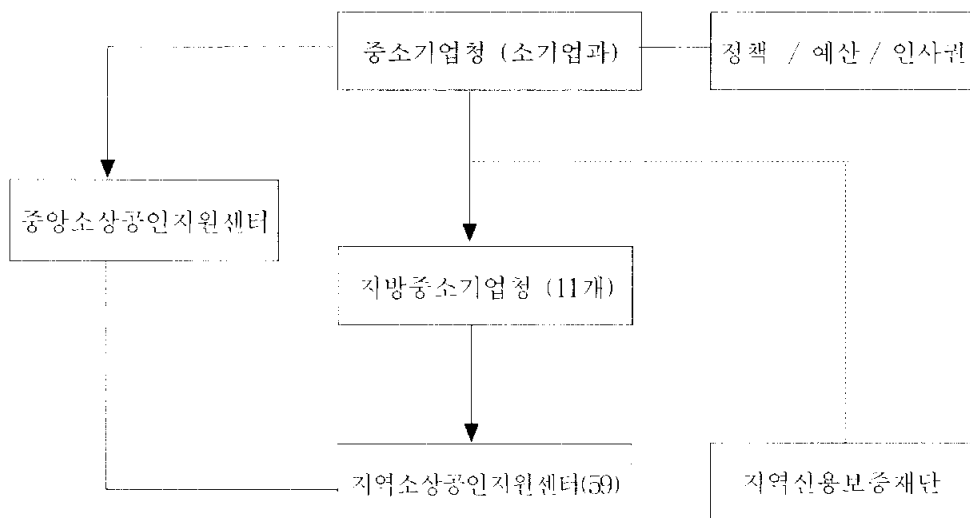
2000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분위기 고조와 함께 창업 제반절차 및 정보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며, 소규모·소자본 창업 및 경영개선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시책이 추진되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과 경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IMF체제 이후 정부의 각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소상공인이라는 최초의 개념 정립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을 최일선에서 밀착지원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가장 근접해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체계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정책과 인사권 및 예산, 지원자금 집행업무 모두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Top Down 방식의 지원체제로 되어있다.

이는 초기에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권 확보는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것을 지휘·통제 받고 있는 <그림 III - 3>과 같은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체계인 Top Down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III 3> 소상공인 지원체계 (Top Down)



(1) 소상공인 지원센터 조직체계 미확립

1999년 2월 소상공인 지원 시범사업 실시 당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도 없었다가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314호)」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위 확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법규로 인정하지 않는 중소기업청 내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제정한 훈령에만 근거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소상공인지원 전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체계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이원화와 업무중복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센터의 사업추진체계 방식을 보면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설치·운영권을,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설치·운영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사업추진체계가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 기관인 중소기업청 내에서도 이원화 되어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각 부서간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다수의 기관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3)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부처내의 이견

과거 정부지원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음·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등 우리나라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실시 후, 소상공인 지원실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실적(상담, 고용창출, 자금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현장지도 : 표 III - 1, III - 2, III - 3)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 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이견을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다. 즉, 예산담당 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자체를 IMF 구제금융 당시의 일시적인 실업대책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4) 소상공인 지원센터 전문 컨설팅 기능 상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첫째는 예비 창업자를 성공 창업으로 유도하고 둘째 소규모 소자본 창업 및 경영개선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며 세 번째 창업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등을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자금 추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소 상담 고객의 상담 내용과 매년 상반기 정책 자금이 배정되어 정책자금을 추천하는 시기에는 지

원 센터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다가 하반기 정책자금의 소진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고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5) 소상공인 지원사업 운영예산 부족

1999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당시에는 14개의 센터에서 출발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센터를 증설하여 2002년 말 현재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에 59개의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되어 운영 중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운영예산은 4년째 동결상태(매년 104억원 규모)에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활발한 사업개발과 추진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실무적인 측면의 문제

(1) 창업 및 경영지도의 문제

① 창업상담 및 지도

창업(Entrepreneurship)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Start-Up)이다. 학문적으로 보면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결합하여 미리 설정된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생산, 판매하거나 그와 부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실무적으로 보면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하에 돈과 사람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곧 창업²⁷⁾이라고 했다.

창업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업자와 사업아이템, 자본이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창업의 기본적인 3요소로 한다. 이 3요소 중 사업 아이템과 자본은 피동적인 요소이고 창업자, 즉 기업가는 기업을 이끌어 가는 능동적인 요소로서 창업자의 재능, 지식, 경험 등은 창업되는 기업의 효율성, 기업의 적응력, 성장 등에 미치는

27) 이진모, 창업학, 서울 : 다성출판사, 2002, p. 63.

영향이 높게 작용하고 있다.

Schumpeter(1934)는 창업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기업가는 창업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의 새로운 결합·상업 방법으로 현상유지를 탈피하는 혁신가로서 기술하고 있다. 그는 창업을 새로운 작업 방법으로 기존의 낡은 방법을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로 정의하며 통상적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활동과 창업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창업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은 혁신이며, 그 혁신은 새로운 일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결합 또는 재분배함으로써 부(富)의 창출 및 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모험적 사업을 시작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사업체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창업시점부터 창업과정 및 운영, 다양한 지식 등 경영전략이 필요한데 이 모든 지식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 사업체에 발생하는 경영상의 애로나 전략에 있어서 상담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쉽게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이 창업한 사업체는 조직, 재무, 판매 등에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전문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선행연구들도 전문가와의 상담(Advice)이 창업 사업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주장하여 왔다.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과정 및 운영은 다양한 지식들을 요구하는 데, 창업자는 그 모든 지식을 다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담은 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을 확대시킴으로써 사업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춘엽, 2000), Cooper 및 그의 동료들 (1991) 과 Vesper(1990)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Lussier(1995)도 성공한 사업체들과 실패한 사업체들의 소유주나 경영자들에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성공사업체와 실패사업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예측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수임을 밝혀냈다.이 연구는 전문적인 상담사를 활용한 사업체가 전문 상담사를 활용하지 않은 사업체보다 더욱 높은 성공확률을 가질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은 기업의 기회창출과 경영개선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사업체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간주 될 수 있다.²⁸⁾

이와 같이 기존에 학자들의 주장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2000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분위기 고조와 함께 창업 제반절차 및 정보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업의 아이템이 200여 가지도 넘는 다양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성이 강한 상담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Top Down 지원체계 하에서 전국의 대부분의 센터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별 소상공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객 대부분도 창업을 하기 전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창업관련 컨설팅, 즉 창업상담과 지도를 요청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을 확정 후 부족한 창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어 컨설팅 및 창업지도에 대한 마인드 부족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실시한 부산지역에 소재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 817 개사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용자 실태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표 III - 11>,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 이외에 도움을 받은 부문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7%, 각종자료 제공이 9.9%, 창업 및 경영

28) 박정기 등, 창업과 취업전략, 대구 : 도서출판 대명, 2001, p. 17.

개선 상담이 34.4%로 조사되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자금지원이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창업자에게 국가의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에서 창업상담 및 지도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2002년도에 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을 3개 서비스 수혜군별로 분류해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금추천을 받고 대출을 받은 업체가 약간만족 이상의 만족이 78.9%로 응답된 반면, 자금이외의 서비스만 받은 업체들은 35.1%로 응답되었고, 자금추천을 받았으나 대출은 받지 못한 업체들은 32.0%만이 약간 만족 이상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이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 이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 중에서 자금 지원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도 요구된다.

<표 III 11>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지원 이외에 도움을 받은 부분은?

항 목	업 체 수	비 율 (%)
창업상담	121	18.4
경영개선상담	105	16.0
각종자료 제공	65	9.9
창업 도우미 업체 알선	7	1.1
기 타	12	1.8
없 음	346	52.7
계	656	100.0

자료 : 부산지역 소상공인자금 이용자 실태분석,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2002)

29)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보고서”, 2002년 12월.

2) 경영개선 지도

Haswell & Holmes(1989)는 창업자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경영 관리적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실패로 귀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 선행연구들 또한 성공 및 실패요인으로 이러한 경영 관리의 부재를 꼽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경영(Management)을 조직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조직·지휘·통제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인적·물적·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함으로써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 가는 순환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⁰⁾

최근 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³¹⁾에 의하면 소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가장 큰애로는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판매애로, 입지 및 환경관련 애로, 정보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중 52.9%의 업체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7.6%는 기업에서 판매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지·환경과 관련된 애로를 호소한 기업은 32.4%로 나타났다.

소기업의 판매애로는 내수시장의 위축, 동종업체간의 과당경쟁, 마케팅·유통시스템의 취약, 제품판매 및 원·부자재 구매상의 불합리 관행 등으로 인한 애로를 제기하고 있다. 입지 및 환경관련 애로는 인허가 절차 등 공장 설립과정에서의 어려움, 입지 및 환경관련 각종 규제, 공장 및 상가 임대와 관련된 문제, 관련 행정기관 이용 애로 등이 소기업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부족은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의 경우 각종 경영 및 기술, 시장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각종 애로 및 경영상의 기회손실이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타 애로에는 행정규제, 불공정거래 관행, 대기업의 불합리 관행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아래 <표 III - 12>와 같이 2001년 소상공인 정책

30) 류태모 외, 경영학원론, 대구 : 도서출판 대명, 2002, p. 20.

31) 주수현, “소기업 경영실태 및 생산구조 분석 - 부산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학술 대회 발표 논문, 2002, p. 15.

자금 지원대상 업체 817 개사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용자 실태 분석」 자료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의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현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부문 이외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경기침체로 판매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 업종내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 사업장의 확장에 따른 자금 부족이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 12> 사업 운영 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항 목	업 체 수	비 율 (10%)
동 업종내 경쟁치열	216	32.9
경기침체로 판매감소	247	37.7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 부족	95	14.5
경험과 노하우 부족	22	3.4
기 타	76	11.6
계	656	100.0

자료 : 부산지역 소상공인자금 이용자 실태분석,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2002)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사업체 경영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보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자신의 사업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판매가 감소했다고 느끼는 것은 소상공인들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경기침체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상기 실태조사 대상업체들에게 경쟁력 확보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65.7%가 특별한 전략 없이 창업 후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상공인 자신들이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자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창업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및 업종전환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체 운영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소상공업 운영 전반에 관한 경영지도, 즉 마케팅, 재무, 세무, 종업원관리, 홍보전략 등 종합적으로 경영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확보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지원의 문제

IMF 금융지원 이후 대기업·금융권의 구조조정, 중견기업의 부도 등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가 일거리를 상실하고 중산층의 붕괴위기 등 사회적 위기상황이 도래하자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직 경기침체로 생계의 곤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국민의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양대 중소기업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여 1999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상담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는 첫째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분위기를 고조하고 창업 제반절차 및 정보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며 둘째 소규모·소자본 창업 및 경영개선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셋째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였으나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창업 교육 부문

제 1 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실태에서와 같이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나름대로의 사업실적을 평가해볼 때 괄목할 만한 신장과 함께 피교육자들에게도 상당한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된지 4년이 경과한 지금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도 너무 한정된 프로그램과 기획되어진 TOOL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음식점, 도·소매업이나, PC방 등의 아이টে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이외에는 크게 만족을 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창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무조건 창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창업교육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창업 전·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자본 창업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 후 경영관리에 따라 사업성고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관련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영관리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창업관련 교육에 있어서도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거의千篇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적위주의 교육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Top Down 방식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청의 평가 및 창업교육 실적을 상부에 보고 또는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 창업과 관련도 없는 특정집단, 그리고 무분별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2) 정보제공 및 기타지원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자금지원업무 이외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나 정보제공이나, 기술전수 등 기타지원업무 분야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소상공인 지원제도 실태 자료의 <표 III - 3>을 보면 19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904건의 창업 가이드 및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전국에 3,613건의 상권을 분석하여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과 생산은 정부의 어느 창업기관과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있을 만큼 양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 가이드나 상권 분석자료들도 Top Down 지원체계 방식에서 기획·발간·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창업 가이드 발간 시 경험 없는 집필가 선정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상권 분석자료들도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업은 경기민감도가 매우 높은 업종으로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수립과 정보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창업 전에 사업성 검토, 창업계획 및 경영전략 등 창업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창업준비단계부터 경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 컨설팅 기관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담과정 및 정보제공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규모가 있는 전문적 특정업종에 대한 창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 컨설팅 기관으로서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각종 지원업무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상담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외부의 자원봉사자 및 창업도우미 그룹을 활용하게 되는 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용역비 수준으로 볼 때 질 높은 정보제공을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문제

아무리 훌륭한 사업아이템과 개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창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본이 적절하게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창업은 불가능하다. 이는 모든 사업체의 행위가 자본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박정기, 2001) 창업자금 조달방법과 종류에는 자기자금(창업자금, 현물출자금, 투자가 자금) 과 타인자금 (정책자금, 금융기관, 사금융)이 사용되고 있다. 즉 자기자금은 창업자가 사업을 구상하면서부터 준비된 자금을 말하며, 타인자금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융기관 자금, 사금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자기자금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또한 타인자본의 과도한 사용은 결국 재무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창업초기부터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창업자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전문가들은 창업자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창업 시 총 투자금액의 70%가 자기자본이면 자본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한다. 왜냐하면 창업 초기에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 쉽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타인자본 조달 시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상환기간이 긴 저리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사업체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소상공인은 그 자산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자기자금보다는 타인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현실적으로 타인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의 경우 재무제표가 있다 해도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신용으로 자금을 조

달하기란 매우 어렵다. (제 Ⅲ 장 표 Ⅲ-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 참조)

중소기업청이 1999년 2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촉진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립 이후,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상담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상담·추천을 하여 1999년 3,000억, 2000년 2,400억, 2001년 3,700억, 2002년 6월말까지 2,500억원 등 1조 1,6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였다.<표 Ⅲ - 13>

자금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정책자금 재원인 정부의 기금 조성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다 보니, 매년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양상(2003년 경우 5월말 소진)을 보이고 있어 자금 추천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자금추천대비 대출 실행율도 50% 미만으로 자금 추천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표 Ⅲ - 13> 소상공인 대출실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년도	추천실적		대출실적		대출실행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1999년	28,111	635,085	14,613	300,000	51.9	47.2
2000년	28,162	723,274	10,518	240,000	37.3	33.1
2001년	27,962	765,658	14,313	370,000	51.2	48.3
2002. 6월	19,347	522,493	10,310	250,000	53.3	47.8
합 계	103,582	2,646,510	49,754	1,160,000	48.0	43.8

자료 : 소상공인 자금지원관련 통계,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2002), 연구자 재 정리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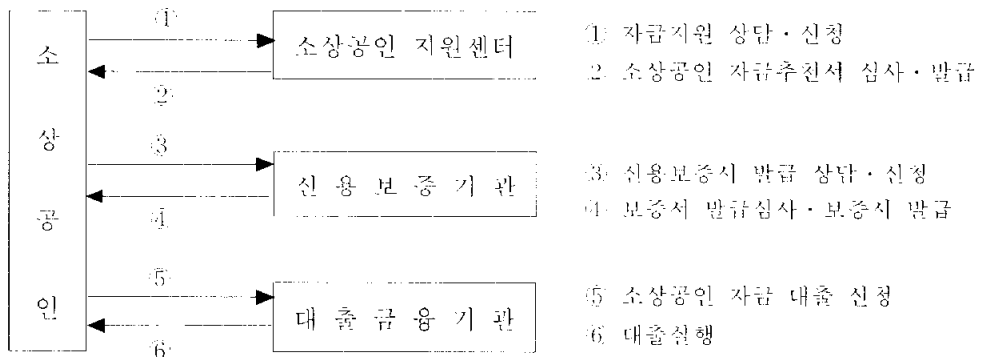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구조 및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구조를 보면 정책입안기관(중소기업청), 산하기관(소

상공인 지원센터),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책입안기관은 주로 중앙부처의 정책입안과 예산편성기능을 담당하고 지원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자격요건, 심사 및 접수창구기능을 갖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자금의 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담보 부족시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다원화되어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의 특성상 담보가 취약한 영세 사업자인 관계로 제 III 장 <표 III -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원 절차에 있어서 아래 <그림 III - 4>와 같이 소상공인이 창업·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2 - 3차례 방문), 보증기관(2 - 3 차례 방문), 대출금융기관(2 - 3차례 방문) 등을 수차례 방문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어 정책자금 이용자의 불편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원화된 지원구조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III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절차도 (보증기관 이용 시)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시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일반적으로 매년 연초에 공고 및 신청 접수하여 대출실행 순서대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관련정책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1999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계속된 자금의 조기소진으로 3/4 분기 또는 4/4분기 중에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특히 2003년의 경우는 1월 7일부터 지원한 정책자금 2,500억원이 3월 26일 소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추가 배정된 1,000억원도 5월 말에 모두 소진되어 2003년 하반기에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및 경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00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창업·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자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미루는 불합리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이 되는 것은 재정자금 규모에도 기인할 수 있겠으나, 정책자금 지원시기면에서도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수 254 만개사로 그 수가 워낙 많아서 현재의 자금규모로는 극소수의 비율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500억원이라는 자금의 규모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한 사람의 소상공인이 차입할 수 있는 평균 액수가 2,500만원일 경우 일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만명이란 숫자는 전국의 254 만개사 소상공인의 25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고용비중과 고용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금

이 회수되어 자체기금으로부터 재원이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99년 정책자금 개시부터 200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왔다. 그러므로 이 재원을 확대 조달해야 한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지원의 증액, 자산유동화 증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계속해서 재특회계 예산만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할당되는 경우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재특회계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적자금 수요를 감안하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일부로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기금을 크게 늘이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워 보인다. 채권 발행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 수요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금수요와 연계된 채권의 금리 조정문제와 만기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등도 문제다.

(4) 대출 소요기간 및 채권보전방법

소상공인지원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그림 III -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절차도 : 보증기관 이용 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담·신청에서부터 대출실행까지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소상공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추천 신청서 발급 후,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 받는 데 있어, 보증기관의 현지 실사 등 업무량이 많을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대출실행까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진행상황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금면에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출소요기간 및 절차의 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평균 대출소요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어 외국의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소요기간과 비교해 볼 때 대출소요기간이 많이 소요

되고 있다. 이외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신용대출시스템 부재에 의한 담보 및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 관행이다. 담보나 보증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도금융이 어려워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 III 장 <표 III -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 이후 2002년 6월말 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 실행 49,754 건 중 담보 대출 건수는 9,754 건(19.6%), 보증서 담보 33,338 건(67%) 으로서 사실상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서의 비중이 86.6%로 영세 사업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기존의 대출관행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5) 용도와 정책자금사용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지정된 업종의 창업이나 경영개선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목적에 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후 동 사업장을 휴·폐업할 경우에 지원자금에 대한 처리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출을 보증한 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지원자금의 유용 및 불법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상공인 지역센터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① 복잡한 보증지원절차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된 자금지원절차 문제이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는 제 III 장 <그림 III - 2>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절차에서와 같이 ㉠ 상담 ㉡ 추천 ㉢ 신용보증 ㉣ 대출 ㉤ 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친다. 그와 관련된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는 ㉠ 상담 ㉡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제출 ㉢ 신용조사 ㉣ 신용보증심사 ㉤ 신용보증약정체결 ㉥ 신용보증서 발급의 과정을 거친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 시 문제점으로는 <표 III - 14>에서와 같이 신용보증서 발급과정에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으로는 비교적 높은 빈도로 지적된 사항들이 서류작성 등 절차의 복잡성과 장시간 소요, 교통 불편과 연대보증인 요구 등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신청·추천과 별도로 신용보증서 발급 시 새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에 서류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배로 소요되어 생계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내용에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54%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 심사과정을 보증기관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표 III 14> 신용보증서 발급과정 시 문제점³²⁾

항 목	비 율 (%)
서류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하다	30
시간이 많이 걸렸다	15
연대보증인의 요구	13
금액이 너무 적었다	12
교통불편, 거리가 멀다	11
불친절하다	4
늦은 가부 결정	4
기 타	11

② 창업 이후에 보증서 발급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자금용도별로 구분해보면 크게 창업대출과 경영개선자금으로 구분되고 있다. 창업자금은 창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생계형 소상공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창업초기에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의 심사기준상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용보증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실사 및 조사시에 소상공인이 영업 중에 있어야만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기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창업을 하고 나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게 된다.

즉 창업 후에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자금문제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이후에 신용보증서 발급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이러한 보증서 발급절차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측의 업무 편의라 할 수 도 있다.

32) 김석진 등, 앞의 논문, p. 145.

(3) 채권보전방법 및 보증기관의 편중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요구된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기관의 여신형태는 본인의 신용을 중시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는 가급적 없애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관의 업무형태는 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려고 해도 연대보증인이 없어 정책자금 신청을 어렵게 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관의 채권보전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 보증기관으로 취급이 편중된 문제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전체 보증서 발급 총액대비 점유율 분석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중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다수가 지점망이 충분하지 못하여 교통 불편 문제와 시간소요가 문제시될 뿐만 아니라 소상공업 특성상 성공확률이 낮아 위험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문제에 원인을 제공할 수 도 있다.

Ⅳ. 소상공인 지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1.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 및 시책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관련법중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불과하며, 각 부문별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제도의 대상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극히 일부의 한정적인 제도·시책만이 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담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간접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규제 완화 및 철폐,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인허가 절차나 용자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조조정, 구조 고도화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앞장에서 미국의 소기업 지원에서와 같이 금융지원의 경우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미국의 SBDC는 비영리 단체에 설치하는 원칙이 확고하며, 전체의 75%정도가 대학에 설치되어 대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설치기관이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1개정도가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기관 모두 공간을 임대하는 역할만 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현재의 일률적인 똑 같은 장소, 지원방식보다는 향후에는 설치기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대학에 센터를 설치하면 산·학·관의 네트워크 기반이 되어 최근 사회문제까지 발전되고 있

는 청년 창업을 통한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III 장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을 최일선에서 밀착지원 하고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과 가장 근접해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정책과 인사권 및 예산, 지원자금 집행업무 모두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Top Down 방식의 지원체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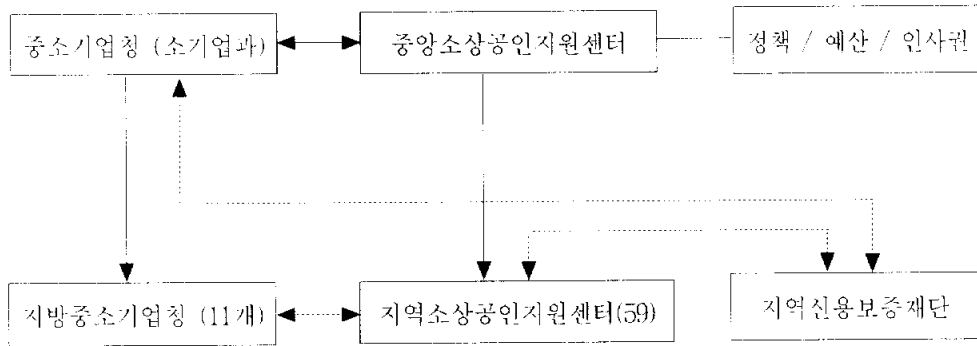
이는 초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한 시기는 IMF 체제하의 건박한 시점이므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을 수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을 관리하고 그 조직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또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권 확보는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것을 지휘·통제 받고 있는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체계인 Top-Down방식은 개선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공단 등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행 소상공인 제도 하에서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차선이지만 예산·인사권이라도 독립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방향만 제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제 III 장의 <그림 III - 3>과 같은 Top Down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방안은 <그림 IV - 1>에서 같이 예산 및 인사권이 독립된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업무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정책 부서와 각 지방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업무협조체계 형태를 유지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조 체계는 신용보증재단 연합회, 신용보증기

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 관련 부서와 본청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된다.

<그림 IV - 1>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가. 소상공인 육성의 필요성

(1)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재정립 필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및 제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소상공업이 산업의 풀뿌리로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중소기업과는 크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정부의 여러 중소기업정책과 연관성 및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입안이나 추진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수립과 함께 사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을 새로이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상공업은 국민의 4분의 1이상의 생계가 달린 막중한 위치에 있고 고용 창출 기술 혁신 등 산업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불 창출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

익활성화기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업을 기획할 당시의 비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32개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서민을 지원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고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자는 것이었다.

센터 설치 후 4년이 훨씬 경과한 지금 초기의 비전은 흐려지고 앞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의 특성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2)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효율화

소상공인 지원행정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의 관련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전담 행정조직으로는 중소기업청 정책국 소기업과와 중앙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위시하여 전국의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59개소)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간에 규모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청이 수립한 중소기업지원시책과 비교를 해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는 많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KOTRA, 중소기업전담은행 등 각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한국은행은 총액한도 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담은행도 있어 일반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들도 특별한 자금 수요 시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254만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규모와 수를 절대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전담보증기관으로 발전시켜 <그림 IV - 1>과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보증재단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본과 기술, 경영의 노하우 면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소상공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가고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만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1)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방법 개선 필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도 없이 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훈령에 근거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우수 상담인력 확보의 문제로 조직체계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면서 재래형 소상공인 창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소프트화 및 지식,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SOHO 창업을 본격 지원하고 전국 상권정보 및 업종별 창업가이드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창업도우미 업체 및 자원봉사자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계속 확충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표 IV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이후 2002년까지 지속적인 센터 증설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 운영예산은 4년째 동결 상태로 활발한 사업 개발 및 추진을 제한하고 있는 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사업개발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초기 년도에는 센터당 예산이 5억원이던 것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내부 여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센터 당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시대 역행적인 예산편성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예산확보·집행권한이 없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예산 집행현황을 봐도 대부분 인건비와 임차료 등 일반 관리비가 70% 이상 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소상공인 창업·경영활동지원, 상권조사·정보제공 등 순수한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연구·상담·지도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활동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양질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의 개선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상담사의 처우 문제다.

센터 개설 당시에는 관련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하여 고학력자를 대거 선발하였으나 현재 신분은 1년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고용상태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직 형태로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새마을 운동본부를 모델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센터의 상담인력들이 진정 소상공인 육성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처우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기능도 상담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 기능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한시점이다.

<표 IV 1>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예산	%	예산	%	예산	%	예산	%
계	10,496	100.0	10,399	100.0	10,419	100.0	10,419	100.0
① 인건비 등	2,930	27.9	4,590	44.1	6,083	58.4	6,083	58.4
② 센터 관리, 인차비등	4,180	39.8	3,097	29.8	1,150	11.0	1,093	10.5
③ 주요 사업비	3,184	30.4	2,394	23.0	2,765	26.5	2,672	25.7
- 창업·경영활동지원	1,418	13.5	880	8.5	910	8.7	1,401	13.5
- 상권조사·정보제공	823	7.8	893	8.6	1,243	11.9	700	6.7
- 홍보 및 창업자료 발간	757	7.2	407	3.9	357	3.4	339	3.3
- 상담사 전문교육	186	1.8	214	2.1	255	2.5	232	2.2
④ 기 타	202	1.9	318	3.1	421	4.1	571	5.4
지원센터 설치 현황	14개소		30개소		50개소		60개소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과 자료 연구자 재 정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제도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기관으로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만 4년이 훨씬 넘었으며 센터도 60개로 그 숫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의 발전방안과 운영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때다.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과 제도를 기획하고 조정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지역특성에 맞으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2) 중앙센터 기능 강화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사업추진체계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권한은 중소기업청 본청과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분리된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추진방식이다 보니 지방센터의 경우 지방청 일부사업으로도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관료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체계인 Top Down 방식에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등 사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을 중앙센터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중앙센터에 소상공인 정책개발·인사·사업개발권 등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중앙센터의 기능을 확대, 정책 결정력을 확보하여 전국 지역센터의 명실상부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전체 사업의 방향 및 운영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관장하여 지역센터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풀어서 여러 지역 센터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센터가 수행해야할 서비스의 종류, 방식, 기술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러한 기능들을 지역센터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의 경우도 1,000개가 넘는 SBDC의 활동은 책임센터에서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각 지역센터에서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소상공인 지원업무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지원사업의 통일성 및 전체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은 각 지역센터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제도의 일원화 및 기타제도

(1) 소상공인 지원업무 창구 일원화

소상공업을 전담하는 부처의 유무 및 그 부처의 상대적 독립성에 있어서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운영의 독자성이 확보된 외청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제도는 미국의 SBDC제도에서 벤치 마킹 하였으나 현재 운영 형태는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수의 기관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수적인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이용하여 일부 정치·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입법, 단체설립, 예산 요구 등을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산업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위상을 정립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각종 지원정책 및 지원제도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상공인 관련지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지원 정책부서의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총괄적인 업무는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제Ⅱ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전체사업체수의 89%가 소상공인 업체수이며 전체산업 종사자수의 42.5%가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인 점을 감안해볼 때 정책 담당부서인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부처 주무 관청인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에서 담당과장,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의 개념 정립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

서 밀착 지원해온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지원전담조직”으로 발전시켜서 현재 실직자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업무, 저소득 여성가장 및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부 산하의 「여성경제인 협회」의 창업지원업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업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업무 등을 통합하여 수요자 대상별로 실질적,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창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원 체계 확립

현재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업무는 지역을 주체로 하여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소상공업 육성을 도모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육성방안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 중에서 자본과 기술, 경영의 노하우 면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소상공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제도나 예산 조성 등을 관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추진해야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기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잘 발달된 미국과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확립되어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이 파트너 십을 형성하거나 상호 협력하여 자금, 정보, 기술 경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제가 확립될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업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현행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연대보증인 위주의 신용보증서 발급방식)을 고려해 볼 때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실패 시 본인 및 친인척까지 피해가 발생되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의 부도시 경영주나 부도기업의 회생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기업의 폐업 및 퇴직 후 생활자금 또는 전업자금으로 활용되는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활용도 및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생활설계를 가능케 함으로써 복지후생의 제고는 물론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출연하여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나, 받은 어음 및 가계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그리고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³³⁾」를 벤치 마킹하여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입하여 가칭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실시하여 자력에 의한 상호부조

3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2002년 6월.

의 조직화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사업성의 하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할 때까지 기간과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중인 고용보험을 원용하여 사업자 보험에 맞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소상공업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업의 부도 시 회생을 용이하게 하고 폐업이나 퇴직 후 소상공업 경영과 개인경제 생활의 연계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창업과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

정책수단의 하나인 조세정책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조세정책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조세지원정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부정책과 대체 또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주된 목적은 자원배분과 분배의 조정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은 재분배보다 자원배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다. 이는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원배분의 조정을 위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포괄적인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좁게 규정된 정책목표를 추고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는 시장의 실패와 비용 상의 불이익의 시정, 제도의 부대

비용 경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의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세제지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서정대, 2001)

우리나라 전체 산업 사업체 수에서 89% <표 II - 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국민의 4분의 1이상의 생계가 달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 있으나, 현행 세법상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고 직접 감면이 아닌 간접 감면 위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반 감면사항이 신고 위주로 되어 있다. 소상공인은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납세신고를 위한 기장이 실제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도 어렵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서는 과세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한다.

참고로 “2003년도 소기업 종합지원계획” 중 세제 지원방법을 보면 초기 창업 기업 법인세·소득세를 6년간 50% 감면해주고, 소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 등이 발표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소기업보다도 더 영세하고 사업체수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수립해야 한다.

2. 실무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가. 창업 및 경영지도의 개선

(1)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강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에 따른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지금, 공공근로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 지속적인 대책을 위해 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예비창업자가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시점부터 창업과정 및 운영, 각종정보 및 경영전략이 필요하나 창업자가 이러한 모든것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로 출발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 중소기업청의 기관평가나 상부기관 보고를 위해 상담건수를 늘리기에 급급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에 관심을 더 두어 상담건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조직이 관료화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단순한 자금상담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위주의 업무방식으로 전환해서, 비록 상담건수가 적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현장밀착형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관찰,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업종 및 아이템 선정 등에 대한 사전준비와 점점 능력을 길러주고 이에 대한 창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성공창업으로 유도하는 맞춤창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전문기관으로 위상 제고 및 조직개편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나,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 비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금추천관련 업무이며 지원센터 방문 고객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을 위해서 센터에 방문한다. 당초 센터가 설립될 당시 정책적으로 고려한 바는 창업 및 경영상담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사업체에 정책자금을 일부 지원한다는 취지였

으나, 현재 소상공인들이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시기는 창업 후에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장의 자금지원제도 문제점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창업 후에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제도적 모순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자가 사전상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센터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전문기관으로 위상 확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일부 지역센터는 자금추천 업무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도, 정보제공 등의 센터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공단」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위상을 더 높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조직의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의 59개 지역센터에는 센터장 포함 4명이 근무하면서, 자금추천 업무와 함께 창업상담, 경영지도, 정보제공, 교육업무 등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보니 어떤 특정분야에서는 상담사별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업을 기획할 당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32개를 설치하려는 비전이였으나, 4년이 경과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산확보 및 지방 분권화 전략추진 등과 고려해볼 때 센터의 추가확대는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59개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광역단체별로 1개 센터로 통합(상담사 20여명 규모)하고, 내부조직을 사업팀제로 전환하여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상담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규모에 1개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업무기능을 크게 상담지도, 자금추천, 연구개발, 교육업무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지방 특색업종의 적극적 지원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지방진출 확대에 의해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정부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밀착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준비중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의 창업상담·경영지도·정보제공과 병행하여 각 지방적 특색업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여, 그 지방에 역사성과 독특성이 있거나 지방경제와 지역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으면서 단체나 조합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개선 지도

소상공인은 1인에 의하여 창업되고 그 사업 내용이 창업자 1인의 특정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전문화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창업이후의 기업활동 (기획, 재무, 생산, 판매, 인력관리 등)이 계속하여 창업자 1인의 지적 수준, 관리능력, 가치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비록 자신의 기술분야에서는 전문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전문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업자 본인의 특정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경영지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데, 소상공인은 조사·기획부문이 현저히 취약하여 환경변화와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보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심

각하지만 소상공인에 요구되는 기장, 기술, 법규, 환경 등 제반 경영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부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며, 그 기능도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은 경영내용이 불안정하고, 담보·신용 및 기장정리가 불충분한 데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경영컨설팅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변화능력과 성공적인 창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영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센터에서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개발·운영중인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소상공인 사업에서 20%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창업 성공률³⁴⁾을 높여 소상공인 사업의 경영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경영지도의 한 분야인 동시에 향후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방법 개선

(1) 지원내용의 전문화 및 교육기능 강화

현재 소상공인의 창업 후 휴·폐업율이 높은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겠으나, 창업 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주지 못하며 실질적인 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사업유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대로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

34) 박준엽,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성 분석, 서울 : 아오출판사, 1991, p. 27.

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경영교육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단순한 자금상담, 자금추천 및 서비스 활동에서 벗어나 실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교육 및 훈련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도 기존의 실적위주의 획일적인 창업교육에서 탈피하여 부문별·계층별 맞춤 창업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예비창업자, 기존의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교육대상자들의 실정에 맞게 이론 및 강의 위주가 아닌 실무와 Work-Shop 중심의 실질적인 창업 및 경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을 위해 Off-Line 교육과 함께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사이버 창업강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 맞게 On-Line 교육도 병행, 강화해나가야 된다고 본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사에게도 정기적인 연수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사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전문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인력의 확보는 결국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양질의 높은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R&D 및 직원 교육에 예산의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254만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도·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1:1 Management 하고 있는 상담사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질 높은 수준의 정보제공과 지원으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사의 전문성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제도적으로 독립을 보장한다 해도 독립성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자원봉사자 및 창업도우미 제도 확대

미국의 경우에는 자원 봉사자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 반해서,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특수한 분야의 창업·경영개선분야를 도와 줄 외부의 자원봉사자와 창업도우미 업체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³⁵⁾ 이는 현재 소상공업 아이템이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254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자금관련 이외에 더 많은 정보제공을 위해서 상담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방법이라 생각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경험과 업종의 자원봉사자와 창업도우미를 계속 확충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용역비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원봉사자나 창업도우미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의뢰할 때 지급하는 현재의 용역비로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산·학·관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강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 해당기관을 찾아 자문하거나 또는 동종업종을 경영하는 주변사람들에게 정보를 습득하는 등 기관별 또는 지원형태별로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시간과 거리의 불편함 그리고 비용의 이중부담 등 경영활동상의 많은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과 관련한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은 One -Stop 형식으로 중소기업

35) 박준엽, 앞의논문, p. 251.

청, SBDC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경영과 관련된 DB구축뿐만 아니라 제반 정보를 한곳에 집중하여 One - Stop 형식으로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소상공인 종합 정보체계를 형성하여 관련 사이트와 연계성을 높이는 등 산·학·관과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향에서 제시한 것처럼 창업지원정책과 제도를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일원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종합적인 DB 구축 및 조사 연구기능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확하고 종합적인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실태에 대한 정보부족, 연구결과의 부족 등 실제 소상공인 겪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 요구, 성공 및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등이 파악되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며 미래지향적인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업운영에 경험 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시장에는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체인본부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경영진단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우수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부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창업에 있어서 경계 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영특성, 요구, 경영상의 애로점 등 산업계 및 학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전문가, 국내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야별 연구활동, 종합 DB구축, 실태조사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소상공업 발전에 기초자료

로 활용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배경이 IMF 이후 경제 악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배경이 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창업지원제도는 고용창출이라는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및 단체들의 각종 DB를 구축하여 창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는 물론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DB가 구축되어야 한다.

3.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국가경제의 성장·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창업·경영 및 성장·발전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게 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좋지 않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김남수,1988)

대부분 창업 사업체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가는 그 사업체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들도 성공한 모든 사업체가 완벽한 재무적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ussier,1996) 하지만, 일부 창업한 사업체들은 자금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상의 작은 실수로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자금통제를 소홀히 하거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자금통제를 저해하고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

동집약적인 도·소매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경제현실과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배려에 탄생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장래의 비전이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입장의 정리 없이 출발하다보니 자금지원 결정방법과 자금지원 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자금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원확보로 매년 배정자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수요자인 소상공인 대부분이 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객관적인 재무정보나 증빙자료에 의한 사업실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사업타당성과 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금추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상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형식 요건만 확인 한 후, 실적위주의 자금추천 경쟁을 하다보니 “소상공인 자금추천서”가 신용보증기관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자기자본과 담보가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지원 및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하며, 현재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절차와 보증방식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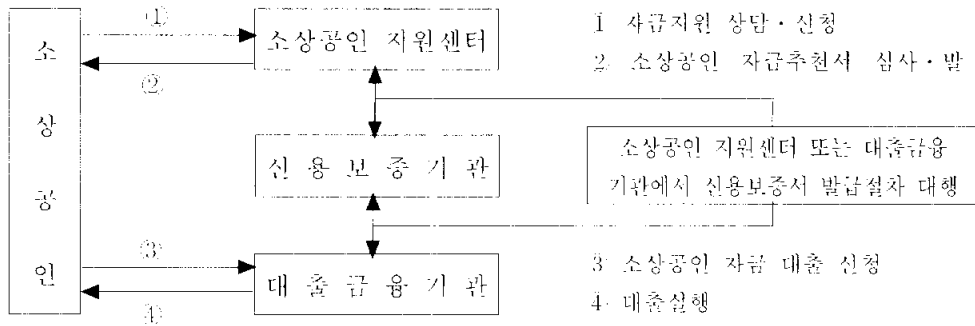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법 개선

소상공인이 창업·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제Ⅲ 장의 문제점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보증기관, 대출금융기관 등을 6회 - 9회에 걸쳐 각각 방문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어 불편과 시간의 낭비는 물론이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금지원구조는 자금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을 정확히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되질 않아서 심리적으로 괜한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떤 형태로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간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One-Stop 시스템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 중 통합화가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통합하여 One-Stop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 전담은행 전문창구 지정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은행 및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보니 대출담당자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각 은행별 각 지점별 요구되는 구비서류, 소요시간, 절차가 달라 사용자로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 III 장의 <그림 III - 4> 과 같이 소상공인이 창업·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보증기관, 대출금융기관 등을 6 -10여 차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는 다원화된 지원구조 및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 지원센터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래 <그림 IV - 2>와 같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보증기관 이용 시 이러한 방법으로 절차가 개선된다면 적어도 2-4 회 정도의 방문 회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림 IV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개선방안 (보증기관 이용 시)



※ 신용보증기관, 대출금융기관, 소상공인 지원센터 네트워크 필요

(2) 정책자금 지원시점 및 방식의 개선

① 정책자금 지원시점 개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상반기에 거의 조기 소진되고 있는 데,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자금 수요는 경기변화나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요가 일정하지 않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가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자금 신청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치우쳐 조기 소진되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자금 요구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자금은 금융기관의 자금보다 유리하므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당연히 선호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 창업 시 지원되는 창업자금의 경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됨으로 인하여 창업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함께 창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일반적으로 매년 연초에 공고 및 신청 접수하여 대출실행 순서대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자금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의 경우 1999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계속된 자금의 조기소진으로 3/4 분기부터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자금지원 혜택을 보지 못했다. 2003년의 경우는 1월 7일 시행한 2,500억원 자금이 3월 26일 소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의 골고루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가 배정된 1,000억원도 5월 말일부터 모두 소진되어 2003년 하반기에 자금 사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경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기존 소상공인은 자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다음연도로 미루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소진이 재정 자금규모 과소성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현재의 정책자금 배정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②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촉진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은 창업 전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영세한 소상공업의 특성상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은 창업 시 자기자본의 절대부족으로 자금조달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업자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담보가 취약하다보니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창업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기준에 맞춰 창업자금이 지원되다보니 실제로는 창업 후에 자금이 지원되는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 신청자를 조사해보면 창업자의 대부

분인 96.1%가 창업 후에 대출을 받았다고 조사되고 있다.³⁶⁾ 이것은 결국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창업과정보다는 창업된 사업체의 자금조달에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창업전에도 지원할 수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창업을 준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배정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선착순으로 조기 소진되는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균형 있는 배분이 되도록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따라서 사전에 배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정책자금 상환방법의 개선

현재의 상환기간 5년(1년거치 4년분할 상환)은 당초의 3년이었던 최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환기간은 미국의 경우 상환기간이 최장 6년, 일본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장 5년, 설비자금은 6년에 비하여 짧다. 한국에서도 소상공인 관련대출의 상환기간을 획일적으로 5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자금용도 (예 :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를 구분하여 상환기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취지 하에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여 자금상환 방식을 월별, 분기별도 선택하여 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36) 박춘엽 등, 앞의 논문, p. 83.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후관리 강화

제 III 장의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은 지원제도에 있어서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대출 신청 당시 업종의 창업이나 경영개선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목적에 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대출을 보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지원 자금의 유용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하지 않는다.

현재 소상공인 지역센터에서는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 지원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사후관리 실태조사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자금 지원 후 영업상태나 만족도 측면이 강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었는지의 조사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소상공인이 휴·폐업 등 사업중지 후에도 정책자금을 계속 수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매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에도 한 원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거나, 사업장이 휴·폐업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나. 신용보증지원 및 신용대출의 확대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창업촉진과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지원 및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인하되고 있으나 신용대출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소수의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기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대출 확대는 필수적이며 그 필요성의 문제도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온 사안이다.

제 Ⅲ 장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에서 살펴본 「일본의 소규모 사업자 지원제도」는 상공회로부터 6개월 이상의 경영지도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일본 상공회에서 자금추천을 하면 무담보·무보증으로 1,000만엔 까지 대출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경영지도 후 특별한 심사를 거쳐 소상공인 자금을 추천하면 보증기관이나 대출금융기관에서 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모델의 개발 및 확산, 사후관리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대출 금융기관에서도 여신심사 시 담보가 확보되면 사업성에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사업성평가 및 향후 수익성, 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시에 반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대출실행 후에도 재무제표에만 의존하는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수시로 사업의 평가 및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 산업의 풀뿌리이며, 국민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254만 소상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도입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1) 신용보증제도 절차의 간소화

제 Ⅲ장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에서 언급했듯이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제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된 자금지원절차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보증지원절차가 문제이다. 따

라서 소상공인 자금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그림 IV - 2>에서와 같이 대출·보증업무 취급 중심기관을 보증기관 또는 대출취급은행으로 단순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절차를 줄여 줄 필요가 있다.

제 II 장의 미국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종류 중 「간편서류 대출 프로그램 (Low Doc Program)」은 관리체계가 부족하고 정보수집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과의 거래시 수익이 미미하여 융자기관이 일정액 이하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승인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 수행을 기피함에 따라 야기되는 소규모 기업의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들이 보증서류 간소화 방안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간편서류 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성공하여 최근에는 지원금액까지 상향조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자금 추천서」를 발급 받으면, 소상공인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금융기관 중 한 개의 기관만 방문하여 자금 지원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그림 IV - 2>와 같이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이 상호업무처리 협약을 통해서 신용보증지원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2)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적 보증방식 지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일회성 대출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회성 지원방식으로는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나 자금 유용 및 불법전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제 III 장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실태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소액대출 지원을 활용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단계별 자금지원은 최초의 대출이 \$100~\$5,000에 이르는 매우 적은 규모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원자금의 회수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점차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단계별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단계적 정책을 활용하게 되면 신청한 시점에서 신청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가의 질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사고의 예방으로 기금의 부실화도 막을 수가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차기 대출시 지원규모의 확대, 연대보증인의 면제, 서류준비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도 하면서 부실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과 중규모 기업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이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처한 현실과 미래의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계에서는 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경제지원과 함께 시작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실업자 일자리 창출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소기업 지원제도인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기본모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상담 및 자금지원업무 그리고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지원 업무를 해왔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은 물론이고 전국 각 지역에 분포 되어있는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로도 이어져 지역간·경제격차의 해소에도 기여해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과거 정부지원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음·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등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훨씬 지난 현재 시점에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소상공인 육성의 필요성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소상공인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중소기업과는 크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국민의 4분의 1이상의 생계가 달린 막중한 위치에 있고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 산업·경제적 및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불 창출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와 수익활성화 기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이다.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동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가장 근접해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만 하겠다.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없이 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훈령에만 근거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것을 지휘·통제 받고 있어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Top Down 방식 지원체계를 중앙센터에 정책개발·인사·사업개발권 등 독립성을 부여하여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일원화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수의 기관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수적인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이용하여 일부 정치·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입법, 단체설립, 예산 요구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지원업무를 산업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위상을 정립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각종 지원정책 및 지원제도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소상공인 관련 지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밀착지원해온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산·학·관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정책과 제도를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창업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외에 현재의 소상공업의 휴·폐업을 감안해 볼 때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실패 시 본인 및 친인척까지 피해가 발생되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부도시에 경영주나 부도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제도」와 같이 가칭「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상공업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지도의 활성화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로 출발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 중소기업청의 기관평가나 상부기관 보고를 위해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에 관심을 두다가는 조직이 관료화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상담건수가 적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창업 및 경영지도를 해주는 현장밀착형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경영지도 개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성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 종합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여야 하고 또한 지역 내 센터별 서비스의 전문화, 특화, 차별화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교육·정보제공 및 기타 지원의 활성화이다. 소상공인의 창업 후 휴·폐업율이 높은 것은 외부의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겠으나, 창업 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주지 못하며 실질적인 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사업유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점 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대로 창업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을 국가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경영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의 전문성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및 창업도우미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D/B)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활성화이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으로 은행 문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소상공인 자금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 중에서 통합화가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통합하여 One-Stop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매년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어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시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시점과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또한 동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창업 준비 시 자금면에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창업이전에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기자본과 담보가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창업촉진과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지원 및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소상공인이 보증기관이나 대출금융기관 중 한 개의 기관만 방문하여 자금 지원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이 상호업무처리 협약을 통해서 신용

보증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한국경제의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앞서의 제도적이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몇 가지 사항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소상공업에 대한 경영의욕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이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높을 때 그 실효성이 높다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자신들의 인식전환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소상공인들이 단순히 보호·지원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생력 있는 경쟁주체로서의 인식강화 및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며 정책당국의 관점에서는 산업정책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적 시각과 사회정책적 시각을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기조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글로벌화, 지식사회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도래로 사회·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어 소상공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전략적 네트워크를 도모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소상공업자 간의 공동화 작업등을 모색하면서 IT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과제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사용과 개념 정립이 일천하여 본 연구의 관련문헌과 실질적인 데이터 및 통계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본 연구자가 소상공인 지원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서술해 보았다.

향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의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그 동안 소상공업 분야와 관련하여 기존의 창업성공요인이나

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지원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소상공인 지원체계 전체의 문제점 파악이나 제도적인 개선방안의 선행연구는 없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논문이 산업의 풀뿌리와 같이 국내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과 경영개선,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김남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 및 R & D 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석진 등,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1호, 2002.
- 김종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남영호, 가족기업의 성공전략, 전국 소상공인 창업·경영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 류태모 등, 경영학원론, 대구 : 도서출판 대명, 2002.
- 박동수, 소상공인 경영의 연구명제 탐색,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논총, 제17집, 2000.
- 박재규, 소상공인 지원제도상의 신용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정기 등,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실태조사 분석,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2001.
- 박정기 등, 창업과 취업전략, 대구 : 도서출판 대명, 2001.
- 박정기 등, 부산지역 소상공인 창업을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4집, 2001.
- 박정기, 소상공인 창업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박준엽,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성분석, 서울 : 아오출판사, 1991.
- 박준엽, 소상공인 지원센터 실지의 이론적 배경,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8.
- 박준엽, 미국의 SBDC와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9.
- 박준엽,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 박준엽 등,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청 제출 보고서, 2000.
- 박준엽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1.
- 민봉식 등, 부산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2001.
- 서근하, 소상공인 특성과 창업성공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서정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중소기업연구원 기타보고서, 2001.
- 유세준 등,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사 만족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 이신모, 창업학. 서울 : 다성출판사, 2002.
- 전병찬 등, 한국의 소상공업 분포와 함축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 정성환 등, 소상공인 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국 소상공인 창업·경영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 주수현, 소기업 경영실태 및 생산구조 분석 - 부산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전국 소상공인 창업·경영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 최숙희,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보고서, 20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기업·소상공인 기본통계, 1999, 2000, 2001.

II. 외국문헌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 총람,平成 12년.

- Cooper, A.C., F.J.Gascon., & C. Woo., A Resourced Based Predication of Venture Survival and growth. *Proceedings of Academy of Management*, 1991.
- Haswell. S., & Holmes, S., Estimating the Small Business Failure Rate : A Reappraisa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989.
- Lussier, R.N., A Non Financial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ation Mode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995.
- Lussier, R.N., A Startup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ation Model for the Retail Industry. *The Mid Atlantic Journal of Business*, 1996.
- Schumpeter, J.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Trans. R. Opi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34.
- Vesper, K.H., *New Venture Experience*. Seattle, Wa : Vector Books, 1996.
- Vesper, K.H.,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80.
- Vesper, K.H., *Three Fac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 A Pilot Stud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1983.